



Occasional Paper Series

03-02

OECD가 본 한국경제

Korea in the OECD Family

◆

Donald Johnston
OECD 사무총장

June 2003

필자 약력

Donald Johnston

現 OECD 사무총장.

캐나다 하원의원(1978~88)으로서 경제·지역개발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으로 활동한 후, 자유당 당수(1990-94) 역임. McGill대 법대 교수(1963-76)로도 재직한 바 있음.

McGill대, 프랑스 Grenoble대卒.

조세법 및 공공정책에 관한 논문 및 저서 다수.

OECD가 본 한국경제*

본인은 이렇게 이른 시간에 강연을 한 적이 거의 없으며, 이는 파리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실, 본인이 오전 7시에 시작되는 포럼에 참석한 것은 세계경제연구원이 처음이다. 이는 매우 유익한 관행으로서 다른 곳 특히 파리에도 확산되었으면 하는데, 파리에 있는 OECD에서 오전 7시에 포럼을 개최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경제연구원과 여러분들 대부분은 경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동향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본인이 몸담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 업무도 경제부문이다. 하지만 OECD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는 광범위하여, 사실상 국방부문을 제외한 모든 공공부문 정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인은 오늘 강연에서 몇 가지 이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OECD 내의 경제전문가들이 보는 일반적인 세계경제 전망인데, 아시다시피 세계경제에 대한 시나리오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이 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주목받고 있는 회원국으로, 솔직히 OECD라는 은하계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별과 같은 존재이다.

현재 OECD 회원국은 30개국이다. OECD는 회원국 확대에 형평을 유지하려 하고 있지만, OECD의 문화와 업무수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회원국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관해서는 유럽 안팎의 많은 국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다.

OECD는 다수의 비회원국들과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사업은 본인이 7년 전 처음 세계경제연구원에서 강연을 한 이후 비약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OECD와 1개 이상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회원국 수는 70개국에 이른다. 이들 국가를 합한다면 OECD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전체 국가의 수는 100개국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OECD는 범세계적인 기구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OECD는 투자계약을 통해 중국, 러시아, 브라질, 발틱 및 발칸 제국들과도 의욕적인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다.

한국에 관해 언급하기 전에 세계경제를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약한데다가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저변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있다. 그러나 OECD의 경제팀은 세계경제 전망을 IMF 등과 같은 기관들에 비해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금년이 아니라 금년이후에 대한 전망으로, 2004년에는 경기가 상승국면에 접어들어 금년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 이 글은 2003년 5월 30일 개최된 특별강연회의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임.

OECD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OECD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금년 들어 수개월간의 미국 경제성장률은 연율 1.9%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모두가 하반기에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는 만큼, 우리가 예상하는 2.5%가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은 유럽이다. 유로지역은 전반적으로 취약성의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 세계경제 성장의 취약점으로 계속 남게 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크게 우려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개최된 OECD 각료회의에서 광범위하게 토의된 바 있다. 1980년대까지는 세계경제가 동조화 현상을 보였지만, 지금은 주요국들의 성장률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과 비교하면 유럽은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훨씬 더 낮아 성장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향후 경제환경을 어렵게 하고 있다.

OECD의 역할은 세계경제가 다시 동조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OECD 각료회의에서는 모든 국가가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다. 즉, 대략 1995년부터 나타난 미국의 생산성 향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러한 생산성 향상을 유럽과 일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물론,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일본과 유럽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유럽의 경우,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반 국민들은 물론 특히 정치권에서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독일이 견실한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예컨대 노동시장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최근 들어 디플레이션 현상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면서부터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미국 및 여타 OECD 국가들은 디플레이션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를 범세계적인 현상으로 보는데 소홀했다. 그 결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알렌 그린스펀(Allen Greenspan)이 디플레이션에 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다. 비록 그가 관리할 수 없는 디플레이션은 없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말이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성장형태는 이러한 생각과 반대로 이루어져 신뢰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우선 9·11 테러사태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사태가 거품붕괴로 인해 경기가 후퇴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다. 주식시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기업의 부정과 비리, 지배구조에 대한 폭로가 잇달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투자자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월 스트리트의 우량기업들에게 14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러한 일을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이와 같은 현상이 미국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유럽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으며 심지어 한국도 자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주식시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이다. 약 1개월 전 파리를 방문한 미국의 어떤 하원의원이 신뢰를 회복할 방도가 무엇인지 물은 적이 있다. 그는 자기 지역구 주민들이 이제 어디에 다 저축을 해야할지, 또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고 했다. 신뢰의 측면에서 본다면 시스템은 붕괴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다행스럽게도 신뢰는 회복될 것이다. 자본시장의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도 원화가 강세현상을 보이고 시장도 건실해지고 있음이 느껴진다. 여러 가지 징후들이 희망적이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OECD를 비롯한 여타 기구들이 해야 할 일들은 아직도 많다. OECD는 1999년에 기업지배원칙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원칙들은 현재 업계에서 도덕적 원칙으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세계은행도 이 원칙들을 개도국들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이를 준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비리와 폭로가 있는 후 OECD 각료회의는 기업지배원칙을 확대·강화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였다. 1999년에 기업지배원칙을 발표할 당시, 우리는 이 원칙이 감사분야 및 눈에 보이지 않는 이해상충이 있는 여타 분야로까지 확대·적용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이해상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혹자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최악의 상황(perfect storm)’ 이라고도 한다. 즉,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이라크 전쟁과 테러, 기업지배구조 문제, 그리고 심지어 거품붕괴와 더불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의미에서 일컫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위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1990년대가 극히 이례적인 기간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마도 현재 은행, 금융 및 산업계에 서 종사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1990년대를 기준으로 삼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의 성장률은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지난 수년 전과 비교해 보면 현재는 매우 궁핍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상을 볼 때에는 아주 긴 기간의 틀 속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오늘을 단순히 어제나 그저계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경기순환은 변동이 있기 마련이다. 개인적으로 본인은 세

계경제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시장은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은행부문도 마찬가지로 회복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 운용에 대해서는 몇 분기 전부터 큰 논란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알랜 그린스펀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 금융부문은 험난했던 시기에서 벗어나 크게 회복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은 주로 위험요소가 다른 분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현재 어느 부문이 이러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본인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본인은 경제성장률이 2.4%이나 2.3%이나, 아니면 2.6%이나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성장추세이다.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수치는 항상 다소의 오차가 있기 마련이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5%, 2.2%, 또는 2.7%이나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느냐 하는 점이며, 그런 뜻에서 2004년의 경제성장률은 증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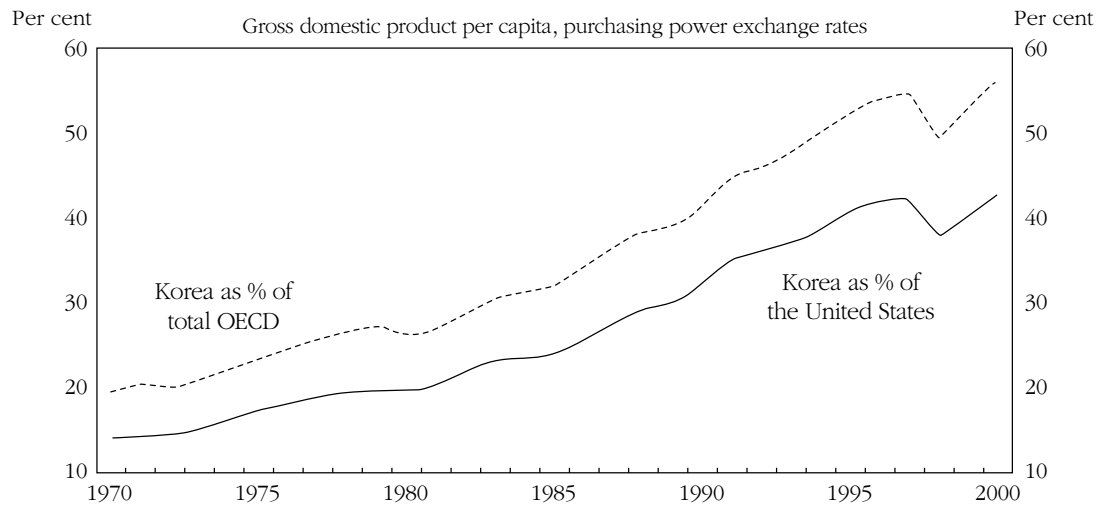
이제 한국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의 경제실적을 나타내는 몇 개의 지표들을 준비해 보았다. 한국이 정책의 선택 및 배합이란 측면에서 낙관적이라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선택과 배합은 대단히 민감하고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이번 강연에서는 OECD 회원국으로서의 한국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996년 한국의 OECD 가입은 35년간의 고도성장에 대한 표상이다.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변모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한국의 성과에 대해 경이롭게 생각하고 있다. 30개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은 11위의 경제대국인 것이다.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한 1인당 소득이 1970년에는 OECD 평균치의 20%에 불과했으나 OECD가입시점인 1996년에는 50% 이상의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한국이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과정은 실로 인상적이었다. 심각했던 1997년의 금융위기는 한국이 OECD 평균치에 근접하는데 있어서 분명한 장애요인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었다. 돌이켜 보면, 솔직히 말해 이러한 전기를 마련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한국이 약 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때가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한국의 이듬해 경제성장률이 1%가 될 것인지 2%가 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8%라고 해도 놀라운 일일텐데, 한국은 1년 동안 약 11%의 경제성장률로 반전하였다. 이는 미증유의 일이다. 본인은 이러한 수준의 반전세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아시아시피 한국은 1998년 이후 대략 연평균 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공의 열쇠는 새로운 시장지향적 구도를 적용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며,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시행한 데 있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OECD 평균치

〈그림 1〉 Income levels in Korea are converging to the OECD average



Source: OECD

에 지속적으로 근접하게 되었다.

〈그림 1〉은 한국의 소득수준이 OECD 평균에 어떻게 근접해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소득수준은 OECD 평균의 2/3(66%) 수준에 근접해 있고, 미국의 2/5(40%) 수준에 거의 도달한 상태이다. 이는 대단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이 특히 우리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전제하에, 최근 OECD 각료회의는 21세기의 경제성장 구도를 확정하도록 OECD에 요청했다. 각료회의는 부문간 혼합방식의 변화 여부를 알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림 2〉 Factors that will determine the pace of convergence

	Strength	Weakness
Sound Macro Policies		
Investment in Productive Assets		
Openness to Trade and investment		
Flexible Labour Markets		
Entrepreneurial Climate		
Innovation: Creation & Adoption		
Human Capital		

How does Korea Stack Up?

〈그림 3〉 KOREA'S ECONOMIC FUNDAMENTALS ARE S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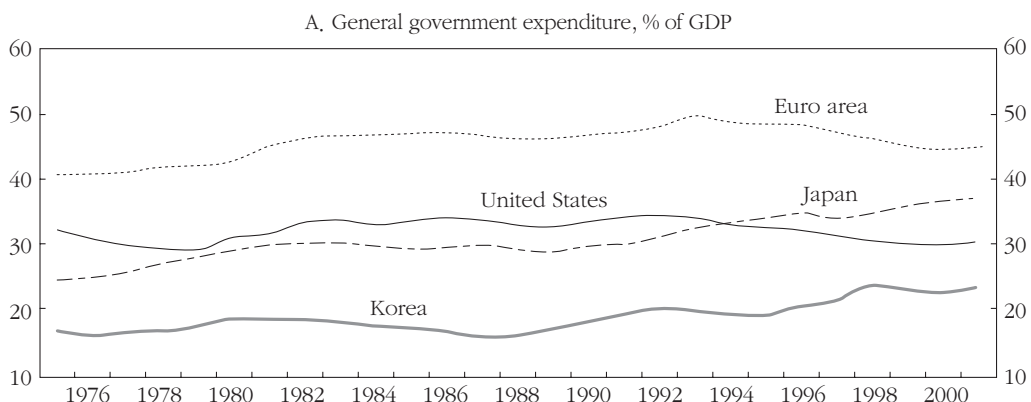
● National Debt:	
<i>Net Government Assets</i>	28.4 % of GDP
● Government Budget:	
<i>Surplus</i>	3.9 % of GDP
● Current Account Balance:	
<i>Surplus</i>	1.3 % of GDP
● Rate of Inflation:	2.8 %

이에 대한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경제성장률과 이에 따른 근접정도를 결정하는 7개 핵심요소들이 추출되었다. 〈그림 2〉는 조금 전에 언급한 핵심요소로서, 거시경제정책의 건전성, 생산재에 대한 투자비중, 무역 및 투자의 개방성, 노동시장 유연성, 기업환경, 혁신적인 개발 및 그 적용성, 그리고 인적자본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과 관련된 이슈들을 보면 국가채무 부분은 양호한 편이다. 정부부문의 순 자산규모는 GDP의 28.4%이며, 재정수지도 GDP의 3.9%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경상수지 또한 GDP의 1.3% 수준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고 물가상승률은 2.8%에 불과하다. 실제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정부가 순 채권자인 3개 국가중 하나이기도 하다. 여타의 거시경제지표들도 역시 긍정적이다. 거시경제정책 건전성이라는 첫 번째 항목에서 한국은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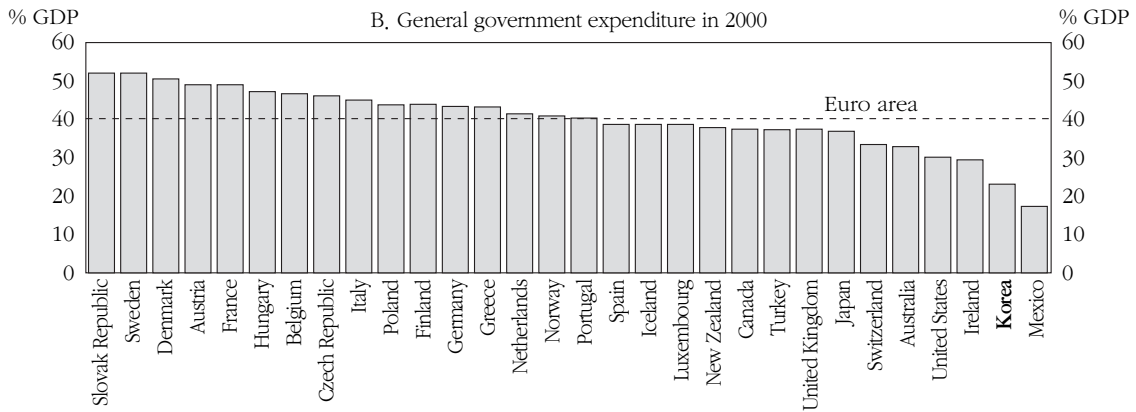
또한 한국은 비교적 작은 정부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한국으로 하여금 튼튼한 재정적 위치에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이유이다. 일반 정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유로지역

〈그림 4〉 Korea has a relatively small government



Source: OECD

〈그림 5〉 Korea has a relatively small government



Source: OECD

〈그림 6〉 The small size of government reflects a low level of social expendi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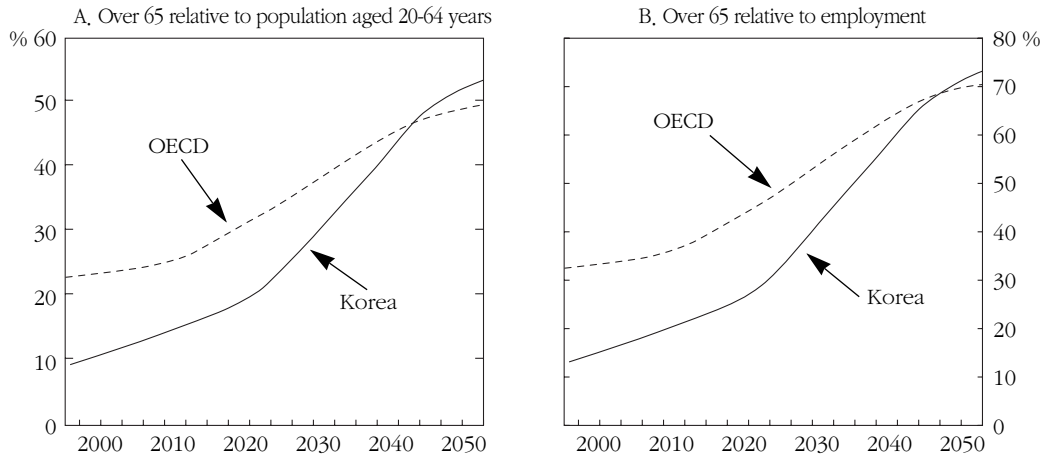


Source: OECD

국가들의 경우 약 45%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이 일본과 미국이다. 반면에 한국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면 1980년대 이후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소폭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유로지역 국가들이나 일본과 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상 한국은 지출을 재정지출 규모가 GDP의 약 22%로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작은 정부를 운용하고 있다.

〈그림 6〉은 한국이 사회보장지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영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이 초기 개발단계라는 점에 기인한다. 예컨대 실업 및 노동시장 지원에 대한 한국의 정부지출은 GDP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약 3%의 낮은 실업률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고용자의 거의 1/3이 일용직이거나 시간제 근로자여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에서도 연유한다. 즉, 실질적으로 실업보험의 적용범위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림 7〉 Korea's population is ageing rapidly



Source: Eurostat and the United Nations.

우리는 실업보험제도의 시행과 함께 그 적용범위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이는 일부 유럽국가의 경우처럼 실업급여를 장기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현실적으로 실업보험제도의 적용범위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지출 규모가 적은 또다른 이유는 현재 한국의 청년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데 있다. 〈그림 7〉은 실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의 노인인구 비중은 OECD국가들 중 터키와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의 노령화는 급진전되어, 현재 7%인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20년 후에는 2배인 14%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한국의 인구학적 현실이다. 한국은 OECD에서 인구구조가 가장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즉, 이는 한국의 공공부문 연금제도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 현재의 제도로는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급격한 노령화 현상과 더불어 북한으로부터의 잠재적인 부담도 가중되기 때문에, 한국은 사회안전망 구축에 신중해야 한다.

실업보험은 중요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국가들의 실패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결과적으로 노동의욕을 저하시키고 고질적인 재정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가장 훌륭한 사례를 비교해 보는 것은 OECD 업무수행의 한 가지 과정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본인은 최악의 사례에서 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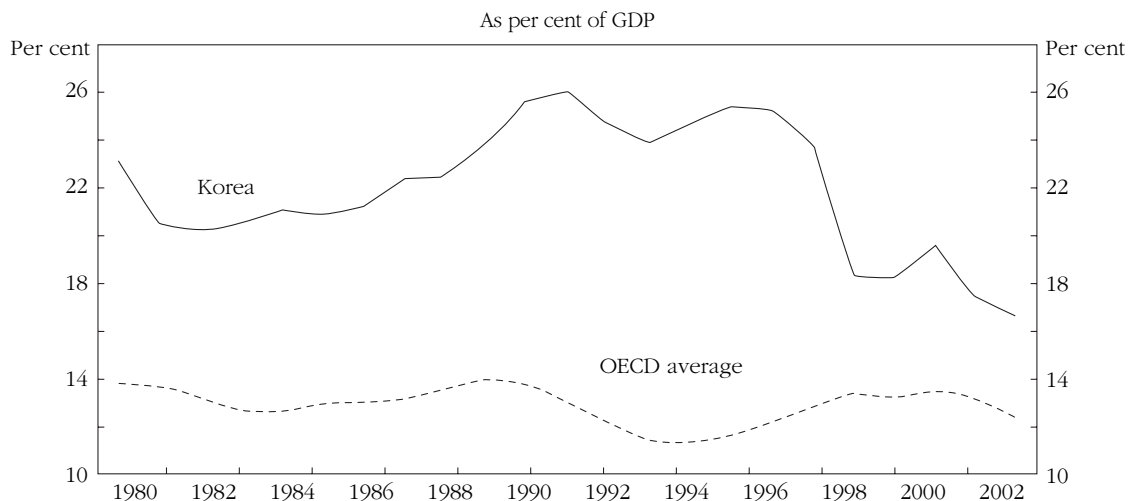
다. 사회안전망 구축이 노동의욕을 저하시키고, 고용과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다.

정치인으로서의 본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혜택을 줄이기보다는 주는 것이 훨씬 쉬운 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본인이 이번에 서울에 올 때 프라하와 프랑크푸르트를 우회하여 올 수밖에 없게 만든 파리의 항공관제사 파업이 그 예이다. 파리에서는 가두시위가 벌어졌고 대부분의 상가도 철시하였다. 운송부문도 파업에 돌입하여 지난주에는 50만명 이상의 군중들이 파리에 운집하였다. 이 모든 사태는 라파랭(Jean Pierre Raffarin) 프랑스 총리가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 근속기간을 종전의 37년 6개월에서 40년으로 2년 반 연장하려 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현재 민간부문에서는 연금 전액을 지급받기 위한 근속연수가 40년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봐도 정치인들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급한 이유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말미암아 사회안전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GDP에 대한 기업투자의 비중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한국은 실적이 비정상적이라고 할만큼 양호하며, OECD 내에서 기업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이다(〈그림 8〉참조). 물론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비중이 대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결코 허약한 상태는 아니다. 차입을 통한 한국 기업들의 과도한 사업확장이 1997년에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투자감소는 기업부문의 재무제표가 건설해진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초고속통신망 이용자수 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중 하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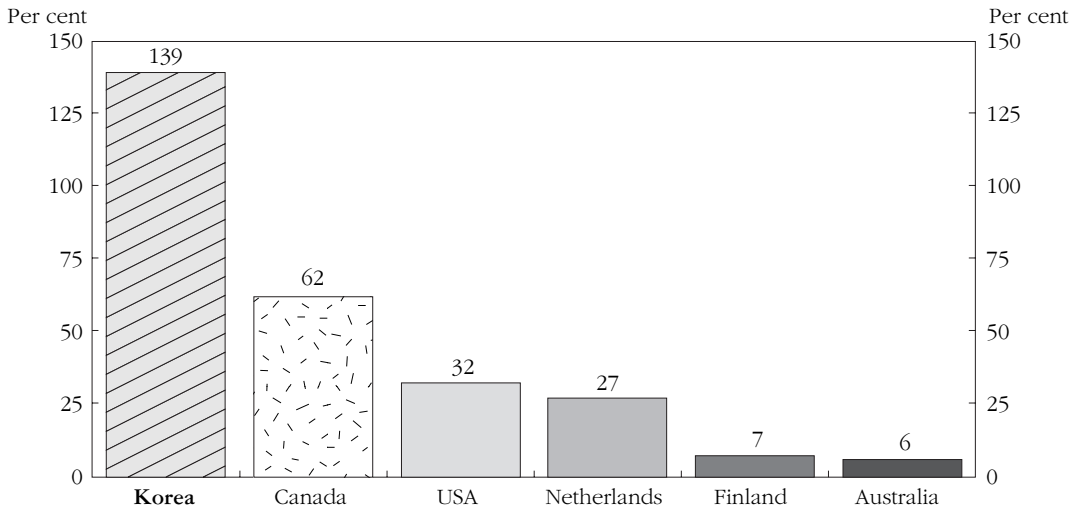
〈그림 8〉 Business investment¹



1. Equals total investment minus residential construction and public investment.

Source: OECD

〈그림 9〉 Broadband subscribers per 1000 inhabit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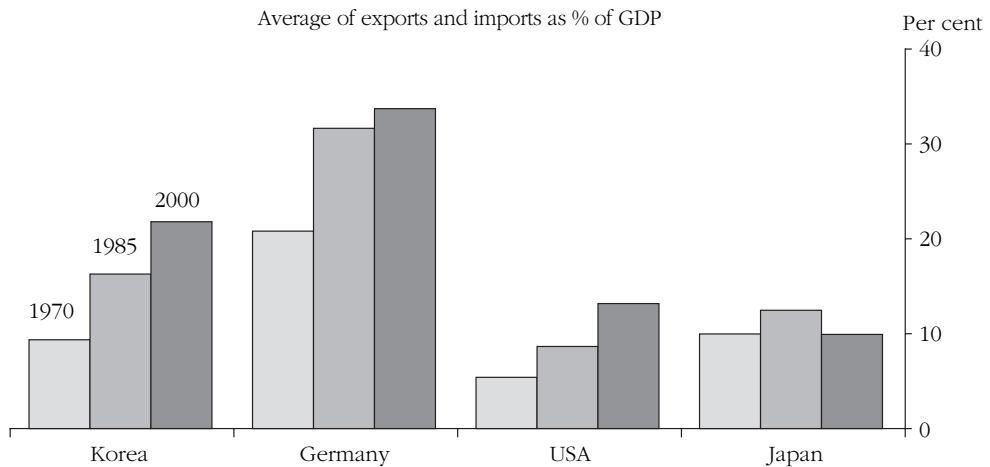


Source: Broadband subscribers in the OECD, June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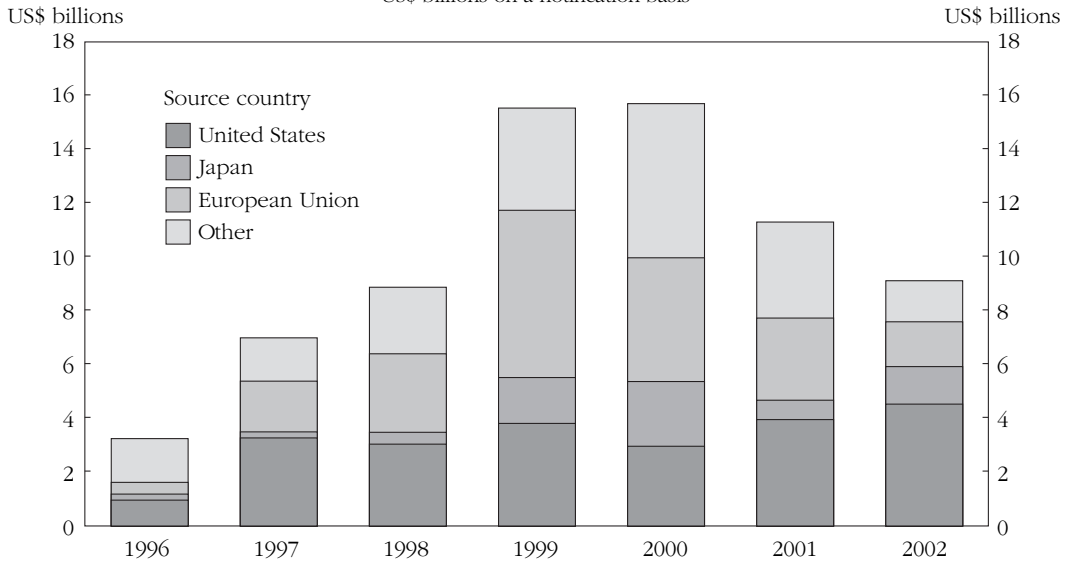
다. 도표에서와 같이 캐나다도 결코 그리 나쁜 수준은 아니지만 초고속통신망 보급률이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미국은 캐나다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본인이 또 하나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무역확대 측면에서 보면,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 개방 부문에서 한국은 커다란 발전을 보여 GDP 대비 수입비중이 지난 30년간 2배나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무역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농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특히 그러하다. 멕시코 칸쿤(Cancun)에서 개최예정인 차기 WTO 협상이 가까워질수록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더욱 활발하게 제기될 것이다.

〈그림 10〉 Foreign trade expan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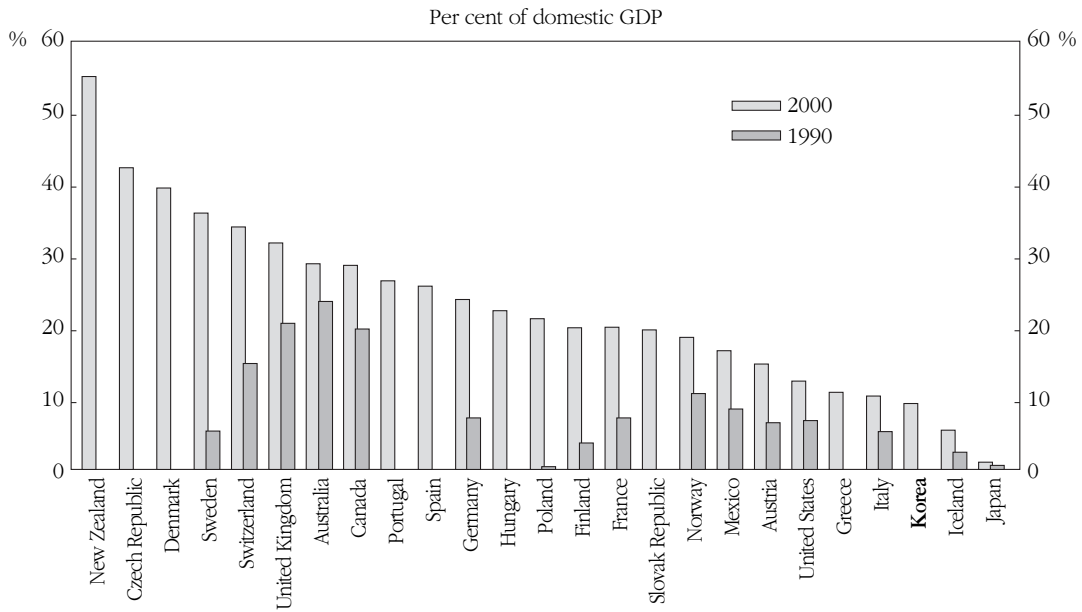


〈그림 11〉 Inflows of FDI increased after crisis
US\$ billions on a notification basis



Sourc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그림 12〉 But stock of FDI in Korea is still relatively low



Source: OECD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 종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한국 경제에서 갖는 역할이 미미하였으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로 인해 〈그림 11〉에서와 같이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약 150억 달러의 FDI가 유입될 정도로 활기를 띠었다.

그 이후 이러한 투자유입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는 세계적으로 FDI가 크게 위축된 데 기인한 것이지, 한국에서만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 아니다. 실제로 세계 전체의 FDI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구조조정의 여파와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FDI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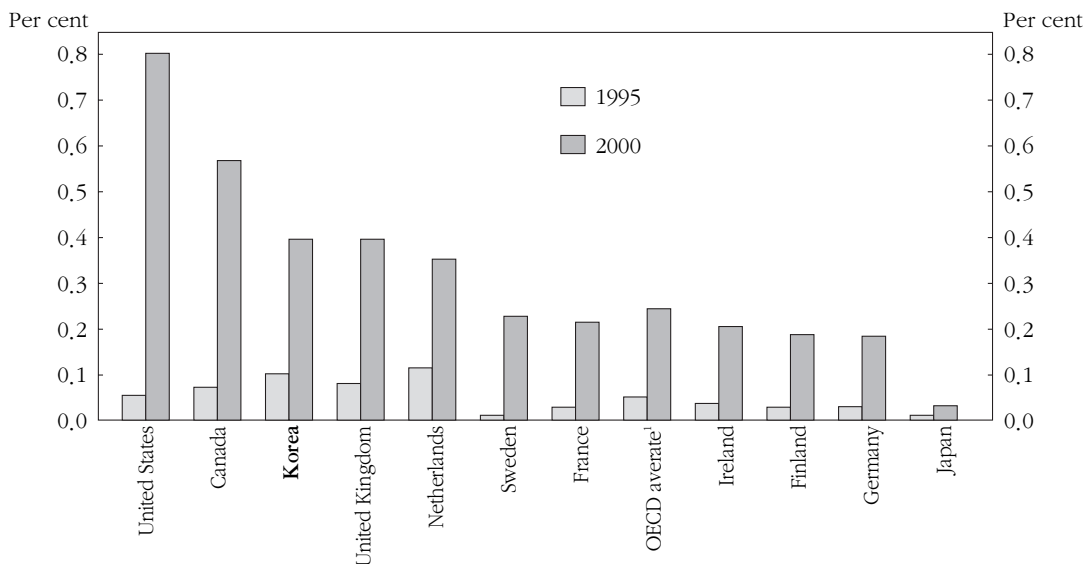
그러나 <그림 12>에서와 같이 한국은 FDI 총 누적액이 아직도 매우 저조하여 OECD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 외국인투자 유입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 중심지역이 되고자 하는 한국의 구상은 더욱 가시화될 것이다. <그림 12>에서 보는 것처럼, GDP 대비 FDI의 비중에 있어서 한국의 순위는 끝에서 3번째에 불과하다.

<그림 13> A flexible labour market in Korea?

- Contentious industrial relations are a key factor discouraging FDI in Korea.
-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 Korea ranked as second highest in the OECD in the late 1990' s.
- Employment flexibility is enhanced by the growing use of non-regular workers.
- Korea has a relatively high degree of wage flexibility.

<그림 14> Venture capital investments

Early stage and expansion financing as % of GDP



1. Average of 19 countries for which data are available.

Source: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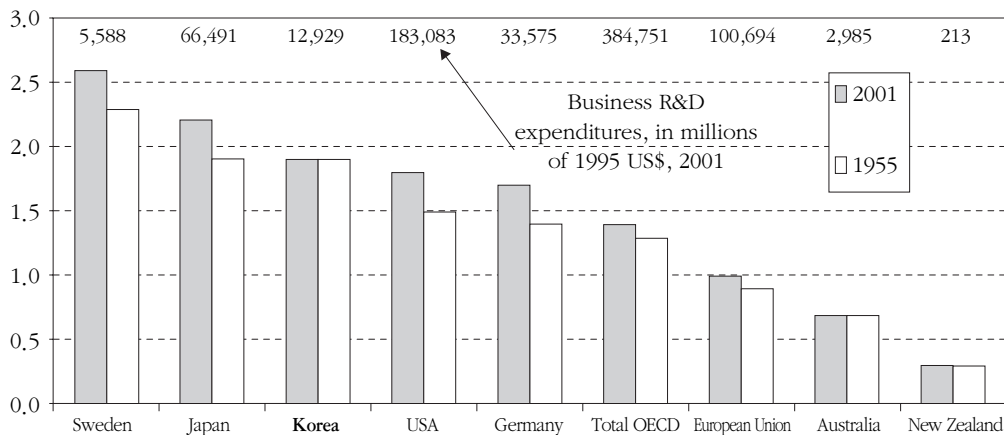
OECD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내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노동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처럼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나라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도는 <그림 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OECD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이다. 한국은 비정규 근로자의 사용확대를 통해 고용의 유연성이 강화되었고 또 임금구조의 유연성도 비교적 크지만, 이 분야에서 해야 할 일들은 많이 남아 있다.

한국의 기업활동 분위기는 매우 양호하다. <그림 14>는 기업환경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인 벤처(venture)자본의 증가율이다. <그림 14>에서 보듯이 2000년의 한국 벤처분야에 대한 초기투자 및 투자확대분의 GDP 점유율이 1995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물론 미국이 가장 앞서있지만 한국도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연구개발비(R&D) 지출 또한 성장의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GDP의 많은 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GDP의 약 2.7%에 달한다. 민간부문이 R&D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타 부문과 대학들의 R&D 투자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그림 15 및 16> 참조). 중요한 점은 정부기관과 대학,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R&D 활동을 통합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시너지(synergy) 효과와 실용화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7>은 한국에게 매우 고무적인 통계이다. 왜냐하면 본인은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이 실시한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PISA 평가는 OECD 회원국의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처럼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평가가 실시된 적은 없었다. 이 프로그램은 총 26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수학, 과학, 언어 분야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실제로 어떻게 응용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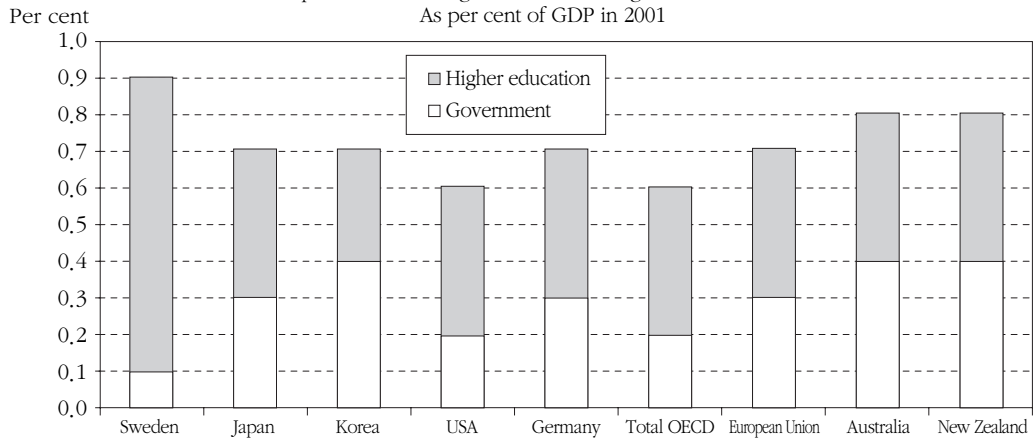
<그림 15> Industry's R&D expenditures
As per cent of GDP



Source: OECD

〈그림 16〉 R&D in other se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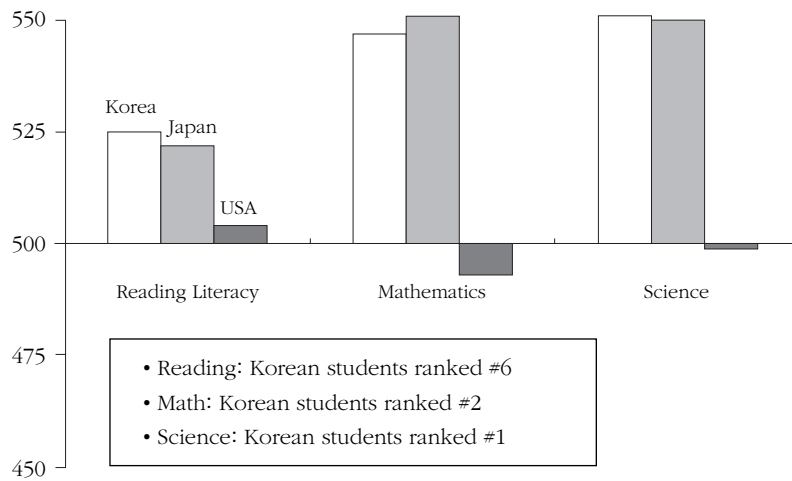
R&D performed in the government and higher education sectors
As per cent of GDP in 2001



Source: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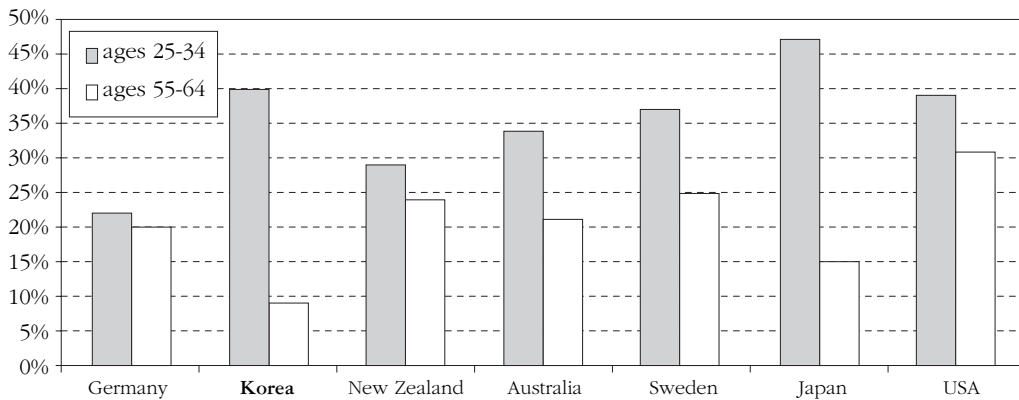
〈그림 17〉 Human capital development

Mean country performance in PISA(OECD Ave=500)



〈그림 18〉 Educational attainment is high

% of population with tertiary-level education, 2001



Source: OECD

그 결과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다. <그림 17>에서는 일본, 한국, 미국의 3개국만 나타나 있지만, OECD 전체 회원국들 중에서 한국 학생들이 차지한 순위는 독해부문에서 6위, 수학부문에서 2위, 과학부문에서 1위였다. 이러한 성적은 실로 놀라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평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제도를 지식기반경제 수요에 부응하도록 더 이상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비 문제를 보면 전반적인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본인은 한국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 열이 대단하여, 사교육비가 공교육비와 거의 같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한국의 풍부한 인적자본 잠재력에 대해서는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지만, 학교와 교과목에 대한 선택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림 18>을 보면 한국의 전반적인 학력 수준 또한 높음을 알 수 있다. 25~34세의 연령층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구의 비중을 보면, 한국은 일본에 이어 OECD 내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졸업자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한국이 1위이다.

결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회보장부문의 지출문제를 다시 한번 더 언급해보면, <그림 19>의 왼쪽 아래 삼각형은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경제성장과 부(富)의 창출을 표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사회적 안정과 결속력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하며, 이와 같은 균형은 훌륭한 관리체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현금 등과 같은 이전방식이 아닌 좋은 고용조건과 적정임금이 보장되는 직업을 짜임새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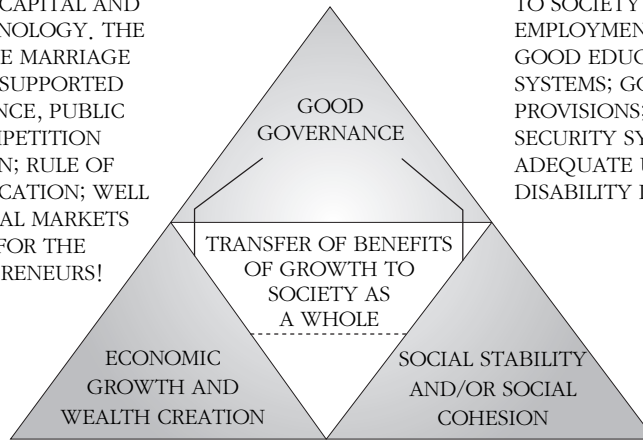
아시다시피 경제성장은 인적자본과 금융자본, 그리고 기술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산물이다. 또, 이러한 결합의 기본 틀은 훌륭한 관리체제, 공공 및 민간 부문, 경쟁법규, 공평과세 등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시장이다.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 결속력은 사회 전반에 대한 부의 공평한 이전에 좌우되는데, 이는 안정된 고용기회, 양질의 교육 및 보건제도, 적정수준의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을 포함한 훌륭한 사회보장제도 및 연금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제성장 성적표는 어떠하며, 어떻게 경제성장을 달성해왔는가? OECD의 경제팀과 사회팀이

〈그림 19〉

ECONOMIC GROWTH AND WEALTH CREATION IS THE PRODUCT OF THE MARRIAGE OF HUMAN CAPITAL, FINANCIAL CAPITAL AND INCREASINGLY TECHNOLOGY. THE FRAMEWORK FOR THE MARRIAGE IS LIBERAL MARKETS SUPPORTED BY GOOD GOVERNANCE, PUBLIC AND PRIVATE; = COMPETITION LAWS; FAIR TAXATION; RULE OF LAW; JUDICIAL APPLICATION; WELL REGULATED FINANCIAL MARKETS ETC. THE CATALYST FOR THE MARRIAGE IS ENTREPRENEURS! ETC.



SOCIAL STABILITY / SOCIAL COHESION DEPENDS UPON AN EQUITABLE TRANSFER OF WEALTH TO SOCIETY AS A WHOLE = GOOD EMPLOYMENT OPPORTUNITIES; GOOD EDUCATION; GOOD HEALTH SYSTEMS; GOOD PENSION PROVISIONS; GOOD SOCIAL SECURITY SYSTEMS INCLUDING ADEQUATE UNEMPLOYMENT AND DISABILITY INSURANCE ETC. -

공동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그림 20〉 참조). 우선 거시경제 부문에서는 한국 정부가 순 채권자이며 재정수지도 흑자라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틀을 개선해야 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신장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한국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생산재에 대한 투자 부문을 보면 한국의 투자율은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기업지배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러한 관행은 한국만의 독특한 문제가 아니다. 무역 및 투자 개방성 부문에서는, 무역장벽이 많이 완화되고 FDI 유치정책이 시행되어 왔지만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장벽은 여전히 높다. 그리고 2000년 이후 FDI가 감소상태인데 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한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부문의 경우, 한국의 임금구조는 비교적 유연성이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정규 근로

〈그림 20〉 Korea's Growth Scorecard

	Strength	Weakness
Sound Macro Policies	Government is a net creditor Budget is in surplus	Need to improve monetary policy framework Need to strengthen central bank's independence
Investment in Productive Assets	Business investment is still high	Need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Openness to Trade and investment	Trade barriers have been relaxed Policies to attract FDI have been implemented	High barriers remain in agriculture FDI has fallen since 2000
Flexible Labour Markets	Wages are relatively flexible Share of non-regular workers is rising	High employment protection for regular workers
Entrepreneurial Climate	Large role for venture capital	Government involvement in venture business needs to be reduced
Innovation: Creation & Adoption	Relatively high level of R&D spending by private sector	Lack of interaction between R&D in government, universities and business
Human Capital	Outstanding scores on international tests	Need for more flexibility in education system

How does Korea Stack Up?

〈그림 21〉 Korea's Growth Scorecard

	Strength	Weakness
Sound Macro Policies	↑	
Investment in Productive Assets	↑	
Openness to Trade and investment		↙
Flexible Labour Markets		↑
Entrepreneurial Climate	↑	
Innovation: Creation & Adoption	↑	
Human Capital	↑	

How does Korea Stack Up?

자들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기업환경 부문에서는 벤처자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지만, 벤처 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은 축소될 필요가 있다. 민간 부문의 R&D 투자가 활발한 만큼 혁신기술 개발 및 그 적용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정부, 대학, 기업간의 상호연계 부족이 기술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본 부문에서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나 교육제도의 유연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종합성적표(〈그림 21〉)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은 거시경제정책의 건전성, 생산재에 대한 투자비중, 기업환경, 혁신기술의 개발 및 적용, 그리고 인적자본 부문에서는 건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무역 및 투자 개방 부문에서는 상황이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취약하며,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문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것들이 OECD가 한국에 대해 보내는 메시지이다.

하지만 OECD 내에서 이처럼 긍정적인 점수를 얻고 있는 국가는 극히 소수이다. 그래서 본인은 한국경제의 앞날이 매우 밝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질 의 · 응 답

[질 문] 귀하는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다. 현 정부는 여러 이익집단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줄 수도 있다.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외국인들의 한국 진출을 저해할 수도 있는 이와 같은 다양한 압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 능력을 귀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답 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본인이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한국은 야심찬 계획을 가진 새로운 대통령을 이제 막 선출하였으며, 본인 역시 대통령 취임식 때 그러한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바 있다. 또한 본인은 오는 6월 30일에 있을 주요 경제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기도 하지만, 정당이나 정치적 틀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분명한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이 최근 수년동안의 중대하고 어려웠던 시기를 잘 극복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이 외국인직접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만약 앞서 언급한 다른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한국은 아주 매력적인 외국인직접투자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한국은 아직도 외국인직접투자가 기대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인데, 이는 현재의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이유들 때문이다. 즉, 노동조합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분이 그 예이다. 본인은 이 부분이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된다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미래지향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던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한국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한국의 노동관련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질 문] 귀하께서는 간략하게 “북한” 이라고만 언급하였는데, 북한 핵문제가 앞으로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기 바란다.

[답 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많은 분석가들은 한국경제의 취약요인으로 이른바 이러한 “위협”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측 인사들과의 대화를 종합해 보면, 대통령 취임식 때보다는 상황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는 북한이 동해에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였다.

장담은 못하겠지만 본인은 3자회담이 성사되면 이 상황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 문제는 OECD 업무에서 다소 벗어난 사안이다.

최근의 북한 핵위협이 가시화되기 수년 전, 본인은 그 당시의 김대중 대통령에게 OECD가 북한경제 전반을 효과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중국, 러시아 및 브라질을 대상으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북한의 강점과 취약점을 모두 조사하려 했던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 프로그램은 한국이 경제적·사회적 개혁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하였을 것이다. 본인은 북한의 비교우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처럼, 우리는 북한이 진정으로 자국 경제발전에 관심이 있다면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 것이다.

OECD는 각 부서를 통해 전체 회원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효과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단은 수요자 중심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OECD는 러시아, 중국, 브라질 등의 정부와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조치들이 어떤 순서로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공동모색하기도 한다.

그러나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눈 후, 중국처럼 북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불행히도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이 동결되었으며, 이제는 이를 추진하자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질 문] 귀하는 세계경제가 내년도에 상승국면의 경기주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여러 번 언급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답 변] “경기주기”를 말하는 것인가? 이는 주로 경제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세상은 한 방향으로만 변화하지 않고 항상 여러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주기가 정상적인 과정의 시작이라는 것이 OECD 내의 대다수 견해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보통신을 비롯한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는 과잉투자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가고 있다. 신뢰가 회복되고 소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소 불안한 점은 있지만 우리는 건실한 성장패턴에 다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칸쿤 다자간 무역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것 역시 앞서 언급한 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무역협상의 성공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역 및 투자를 전 세계로 확대시킬 잠재력에 대한 신뢰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의 회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보이고 있지만, 위험요소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질 문] 전반적인 세계화의 추진동향과 제도변화의 필요성에 관해 질문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에 돌입하면서부터 국가간의 국민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귀하는 OECD 회원국간의 GDP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고 보는가? 또, OECD 회원국들의 제도가 동조화 되어 가는 것으로 보는가? 세계화란 세계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의미하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사회보장제도 등에 있어 독자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당초 한국은 미국 등의 제도와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운용했으나, 오늘날에는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치가들이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때는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답 변] 이는 무역 및 투자 자유화로 표현되는 세계화와 시장개방에 관한 문제이다. 부의 창출은 무역과 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측정 가능한 것이며, 실제로 OECD에서는 이를 측정할 바 있다. 우리는 실적을 바탕으로 세계화에 동참한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부를 창출할 수 있었는지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했다.

본인에게는 무역 및 투자를 개방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를 실제 수치를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이것이 비록 일방적인 기준이기는 하지만, 무역 및 투자를 개방한 국가들이 더 많은 부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부가 해당국가 내에서는 어떻게 분배되어 왔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세계화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즉, 한 부문에 유리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부문에 대해서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화를 통해 축적된 부가 소수에게만 귀속되고 있느냐, 아니면 고소득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혜택들이 어디로 귀속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이다. 대다수 미국인들이나 유럽인들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러한 혜택은 상품선택의 폭과 가격하락을 통해 크게 나타난다. 오늘날 전 세계의 일반가정들은 다양한 소비재를 선택할 수 있다는 면에서 무역자유화로부터 큰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심지어 선택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는 경우마저 간혹 있다.

세계화의 혜택은 크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빈부격차는 축소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빈곤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슈이므로 사회학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인 것으로 생각되며, OECD는 빈곤의 문제를 절대적인 관점이 아닌 상대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역자유화로부터의 혜택이 있다는 증거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자국민들이 충분히 참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실직자들에게 재취업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유리하다.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에서 세계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비숙련 노동자들로, 다소 나이가 많고 취업전선에 다시 합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식기반경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때

문에 각국들은 조기퇴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또 젊은 계층을 위해서는 재취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정책입안자들에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도기이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가의 제도나 모델이 동일해질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림 19>에 제시된 삼각형들은 반드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접근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인들은 덴마크에서 부과되고 있는 수준의 세율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덴마크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편에 속하지만, 반면에 공공부문의 혜택도 많이 받고 있다. 덴마크는 비교적 균등한 사회로, 교육비와 의료비의 부담이 없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결집과 경제성장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을 미국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미국의 모델을 덴마크에 적용시킨다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유럽과 미국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는 캐나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및 사회 보장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보장범위가 미국보다는 크지만 유럽만큼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캐나다의 경우에서조차도 정치인들은 사회보장 혜택을 일부 축소시키기 위해 시스템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신발은 절대로 없으며, 각 나라의 상황 역시 서로 다르다. 따라서 부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면 그 제도는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1인당 GDP가 1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소득증가의 추세에 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다. 한국은 과거에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실제로 에르네스토 제딜로(Ernesto Zedillo) 전 멕시코 대통령은, 과거에 멕시코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았다는 점을 자국민들에게 지적하곤 하였다. 즉, 한국이 이루어 낸 것을 왜 멕시코가 할 수 없냐고 물은 것이다. 건실한 실적을 이루어 온 한국은 다른 나라의 귀감이 되고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질문] 외국인직접투자는 두 가지 부분에서 혜택이 있다. 첫째는 자본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둘째는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두 번째 혜택은 새로운 경영기법과 사고를 통해 더 큰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OECD는 이와 같은 외국인직접투자의 혜택에 관해 연구한 바가 있는가? 또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의 어느 분야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가?

[답변] 아주 옳은 지적이다.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해 논할 경우, 실제 외국인직접투자분이 국내저축에서 유입되는 투자분보다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도 1인당 저축률이 세계에

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중국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이러한 투자를 생산부문에 접목시키려는데 있는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두 가지 큰 혜택을 준다. 이 경우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기법 도입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점이 외국인직접투자의 커다란 매력 중 하나다. 게다가, 하고자 한다면 국영기업의 경쟁력도 제고시킬 수 있다. 국영기업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단순히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한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기업은 기술, 효율성, 경영기법의 측면에서 국영기업 부문에 대해 큰 파급효과를 줄 수 있으며, 부수적인 혜택도 거의 모든 면에서 실제 도입된 자본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Korea in the OECD Family*

It is a pleasure to be back in Seoul today. It is not very often that I have the opportunity to speak at this early hour of the morning, certainly not in Paris. In fact, this is the only forum where I have been where one begins the morning at 7:00am with a breakfast. I think it is a very good precedent for some of us elsewhere, particularly in Paris. At our forum at the OECD in Paris, it is very unlikely that we would begin at 7:00am.

This is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and many people in this room follow economics very closely. I ru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ur economics department is, of course, central to our work. But our work also covers a vast number of areas, in fact all areas of public policy except defense.

This morning I will touch upon a few issues: one, the general global outlook as seen by the economists at the OECD. This is a rapidly changing scenario, as we all know. Secondly I would like to say a few things about Korea. Korea is a very significant member of the OECD. It is a recent member. Korea is, quite frankly, one of the bright shining stars of the galaxy of OECD membership.

There are now 30 members in the OECD. It looks like the OECD is also poised for expansion, but no one knows quite how that is to be done to maintain its culture and working methods. There are strong demands coming from many countries, both in Europe and outside of Europe.

We do have work programs with many non-member countries. That has expanded quite dramatically since I first spoke here seven years ago. We now have work programs of one kind or another with 70 non-member countries. That takes our total to 100. So can see that the OECD has quite a global reach. We have very ambitious programs with China, Russia, Brazil, the Baltics, and the Balkans through the investment compact.

Before I get into the issues about Korea, it is clear to all of us that growth remains weak and hesitant. There are risks on the downside. But by and large the economics department at the

* This is the transcription of a speech given at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Distinguished Lecture Forum on Friday, May 30, 2003.

OECD has been a bit more optimistic in its outlook than, say, the IMF. This has not been so true about the current year, but going forward. The general view at the OECD is that the cycle will pick up, and that 2004 will register substantially more growth than the current year.

The OECD predicts about 2.5% growth for the US. The US in fact recorded 1.9% from an annualized basis over the first few months this year. Also, everyone anticipates that the second half will be a much stronger half. So our prediction of 2.5% may not be too far off the mark.

Serious concerns are expressed about Europe, the euro-zone in general, and Germany in particular. It has shown great signs of weakness. Japan, as well, continues to be a weak party in global economic development going forward.

The divergence of growth across the world is of great concern. This was discussed in a very general way at the most recent OECD Ministerial. Up until the 1980s there was a convergence of growth. Now there is concern since the leading economies are growing at different rates. The US grows at one rate, the European economies grow at a lesser rate, and Japan grows at an even slower rate. This portends very serious circumstances for the future.

Our role at the OECD is to try to bring about convergence. At the OECD Ministerial we discussed how we could stimulate growth in all economies. How do we translate the productivity gains, measurable in the US from about 1995? How can those be used and exploited in a positive way in Europe and Japan? Of course, there is recognition that serious structural issues in both Japan and Europe hold back growth.

On the other hand, to be optimistic, there is in Europe a rising tide of public opinion, and especially at the political level, that change is necessary. Some of the fundamental structural problems, in labor markets for example, simply have to be addressed if Germany is to get back on a solid growth track. It needs to be the kind of locomotive we all expect it to be and feel it should be.

Deflation has also taken up a lot of space recently. The Japanese began discussing it some time ago when they began their deflationary period. As a global phenomenon, it has been largely dismissed, certainly by the US and other countries in the OECD. It was not seen as being a real possibility. Subsequently, there has been more concern about deflation. You can read the comments by Alan Greenspan. He at least talks about the issue, though he believes the any

deflation will be manageable. Hopefully, the growth patterns we see emerging will counter that sort of thinking and confidence will be restored.

Quite frankly, the convergence of events has been quite extraordinary. We first had September 11. But it came at the end of a cycle, which coincided with the popping of the technology bubble. The stock markets then crashed to earth. The revelations then came to light of corporate mischief, corporate misdemeanors and corporate governance. These occurred not only in corporate boardrooms, but ranged right down to investment advisors and the conflicts of interest we saw. Could you have imagined blue chip firms on Wall Street being fined US\$ 1.4 billion? Who would ever have anticipated this? It wasn't just the US. We had similar examples in Europe. And even Korea had its own problems.

The general public's confidence in equity markets was really shaken. A US member of Congress coming through Paris about a month ago asked what he could do to restore confidence. He said that his electors did not know where to put their savings. They did not know whom to rely on. From a confidence point of view, the system is really under siege.

Hopefully, confidence will return. Equity markets seem to be improving. I notice that here in Korea the won is strengthening and markets are strengthening. The signs are hopeful. But clearly we still have a lot of work to do at the OECD and elsewhere on issues like corporate governance reforms. We publishe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in 1999. They are now largely accepted as the moral principles of the business world. The World Bank uses them in the developing world. China is using them.

After these scandals and revelations, the OECD Ministerial asked us to update our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They had to be broadened. When we developed thes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in 1999, we did not anticipate that they would have to stretch into the auditing world and other areas where there were no visible conflicts of interest. Such conflicts have since emerged. So this has not been an easy period.

Some refer to it as the "perfect storm" of the economy. All of these events converged, plus, of course, the Iraqi war, terrorism, corporate governance, and even the bubble. For all that, we still have growth. That should encourage us.

We have to keep in mind that the 1990s were exceptional. Perhaps the generation of young

people involved in banking, finance and industry today is using the 1990s as its benchmark. In the 1990s, however, the growth was really quite exceptional. If one looks back a few years, certainly we could say that we are in dire straits. But the reality is we have to take a much longer look at a much longer timeframe. We cannot measure today simply on yesterday, but also against the day before yesterday. These cycles come and go. Personally, I am rather optimistic that the global economy is going to work its way through this phase.

I also think financial markets have been quite resilient. I think the banking sector has been quite resilient.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criticism from some quarters on the use of derivatives. But, again, as Alan Greenspan has pointed out, the US banking sector has come out of this very difficult period with great resilience, largely because of spreading risk elsewhere. There is a question mark as to who is holding this risk. But I tend to be rather optimistic about the future.

I do not like to get into debates about whether growth is going to be 2.4%, 2.3% or 2.6%. The trend is what is important. In my experience, the numbers always turn out to be wrong, more or less. To debate at length whether the US is to grow at 2.5%, 2.2% or 2.7% is irrelevan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re is growth as far as we can see. It will pick up in 2004.

Let me now turn to Korea. There are some diagrams I have prepared that illustrate Korea's progress. Korea has very good reason to be optimistic about the policy mix and policy choices ahead. They are extremely sensitive and will be extremely difficult.

My talk today is about Korea in the OECD family. Korea's accession to the OECD in 1996 represented the culmination of 35 years of really extraordinary growth. It was transformed from one of the poorest nations in the world to the 11th largest economy. Think about that figure. Many people do not fully appreciate that accomplishment. Korea is the 11th largest economy, and there are thirty governments represented in the OECD.

The per capita income was boosted in purchasing power parity terms from about one fifth (20%) of the OECD average in 1970 to more than half (50%) in 1996 when they joined. Then, Korea's recovery from the crisis was especially impressive. The severe crisis in 1997 obviously interrupted the convergence process toward the OECD average. The success in implementing a broad range of structural reforms helped achieve a remarkable turnaround. A turnaround, quite frankly, that is quite difficult to believe when looking back.

I remember when a contraction of about 6% occurred. We all debated whether Korea wou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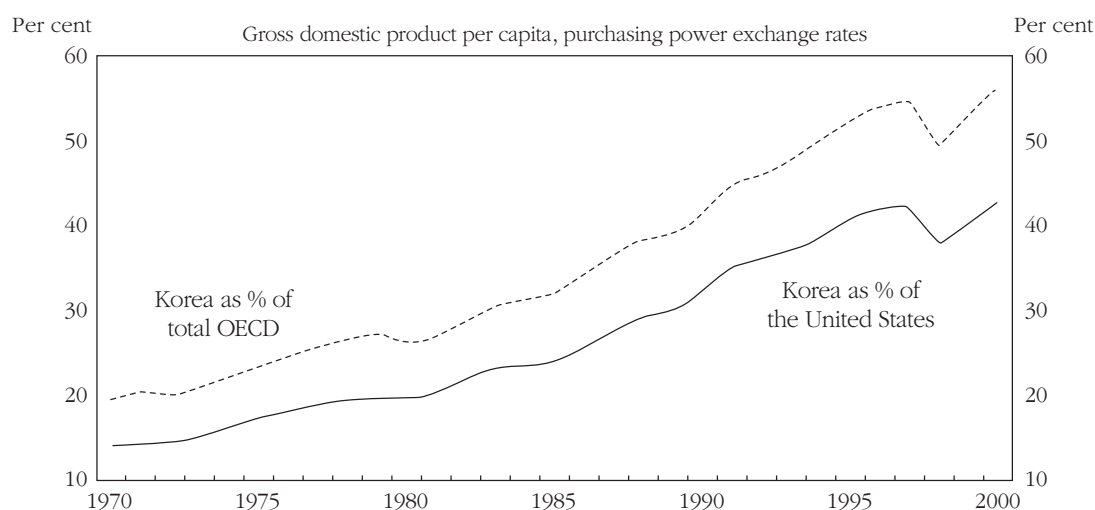
subsequently see 1% or 2% growth. Even an 8% turnaround would have been wonderful. Korea ended up posting about an 11% turnaround in one year. That is unprecedented. I cannot recall any turnaround of that magnitude. As you know, growth has averaged about 7% per year since 1998. Implementing a new market-oriented framework, accelerating restructuring, and policies that maintained macroeconomic stability were all key to these successes. They all helped Korea maintain these high growth rates, which is continuing the convergence toward the OECD average.

Figure #1 shows income levels in Korea, and how they have been converging to the OECD average. Korea is now close to two thirds (66%) the OECD average, and almost two fifths (40%) that of the US. This is a remarkable accomplishment.

The OECD Ministerial recently asked us to determine the composition of economic growth today in the 21st century, especially given that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 play a large part in our lives. They wanted to know whether the mix of components has changed.

The study was well received. It found that there are seven key factors that seem to determine the rate of growth, and hence the rate of the convergence process. Figure #2 shows factors mentioned a moment ago: sound macroeconomic policies; investment in productive assets; openness to trade and investment; flexible labor markets; entrepreneurial climate; innovation creation and adoption; and human capital.

Figure 1. Income levels in Korea are converging to the OECD average



Source: OECD

Figure 2. Factors that will determine the pace of convergence

	Strength	Weakness
Sound Macro Policies		
Investment in Productive Assets		
Openness to Trade and investment		
Flexible Labour Markets		
Entrepreneurial Climate		
Innovation: Creation & Adoption		
Human Capital		

How does Korea Stack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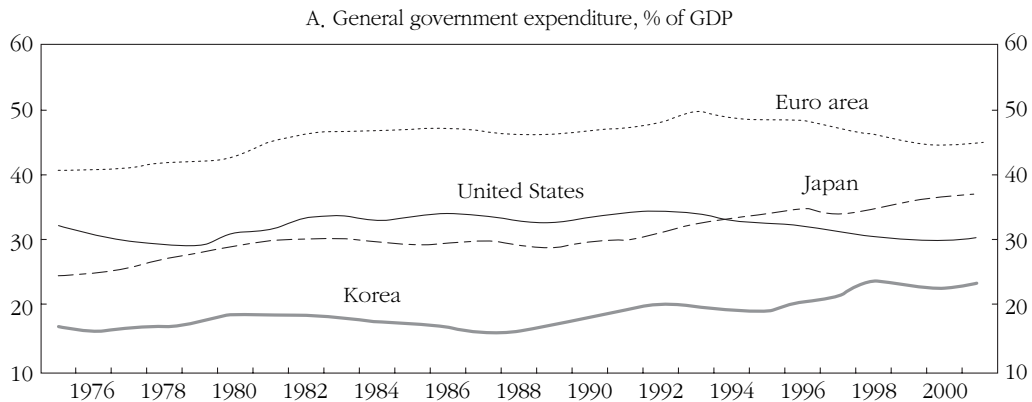
Figure 3. KOREA' S ECONOMIC FUNDAMENTALS ARE SO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ional Debt: <i>Net Government Assets 28.4 % of GDP</i> ● Government Budget: <i>Surplus 3.9 % of GDP</i> ● Current Account Balance: <i>Surplus 1.3 % of GDP</i> ● Rate of Inflation: 2.8 %

On the issue of Korea's economic fundamentals, the national debt looks good. Net government assets are 28.4% of GDP. The government budget is in surplus, of 3.9%. Current account balance also has a surplus, of 1.3%, and the rate of inflation is only 2.8%. In fact, Korea is one of only three countries in the OECD where the government is a net creditor. Other macroeconomic indicators are also positive. I would say that on the first test, the one of sound macroeconomic policies, Korea is doing very w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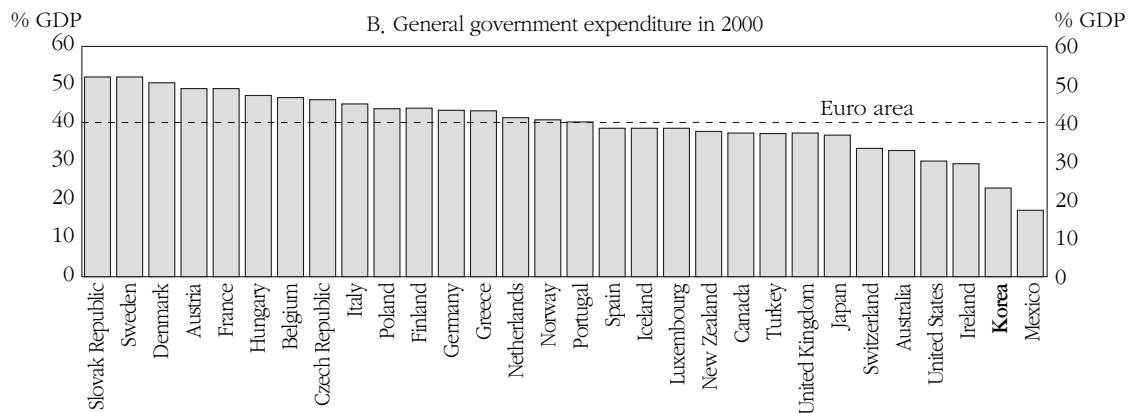
Korea also has a relatively small government. That is one reason for its strong financial position. When you look at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s as a percentage of GDP, you will see the euro-zone sits at about 45%. Then Japan and the US. And Korea comes in quite low. Spending as a share of GDP has been on a modest upward path since the 1980s, as seen in Figure #4. But it is still well below the euro-zone, Japan and the US. In fact, Korea, at about 22% of GDP, had the second smallest government after Mexico when measured by expenditure, as seen in Figure #5.

Figure 4. Korea has a relatively small government



Source: OECD

Figure 5. Korea has a relatively small gover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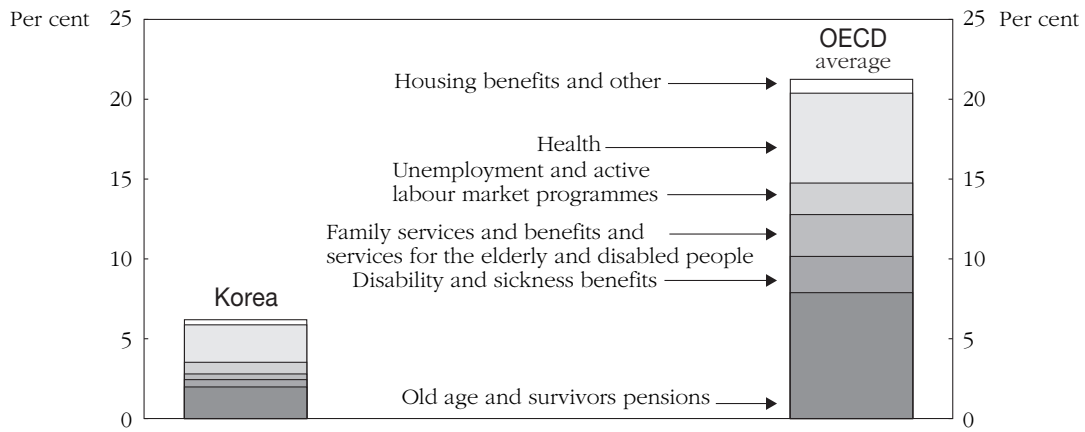


Source: OECD

The reason for this small government is the low level of social expenditure in Korea, as shown in Figure #6. That is partly due to the fact that the social safety net is only at the early stages of development here. For example, in the area of unemployment and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Korea spends less than 1% of GDP. This reflects the fact that unemployment is relatively low, at around 3%. But it also represents the fact that almost one third (33%) of employees, notably daily workers and part-time workers, are not eligible. Effectively, the un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is not very hi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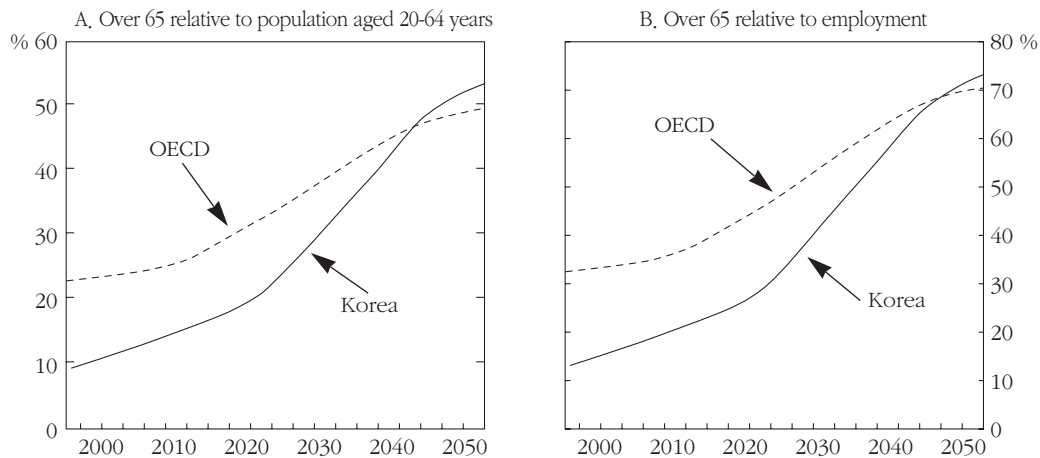
We feel that this sort of coverage and the enforcement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are essential. I am not talking about paying people to be on long-term unemployment benefits as we find in some European countries. The reality is that it makes a major contribution to enhancing labor market flexibility.

Figure 6. The small size of government reflects a low level of social expenditure



Source: OECD

Figure 7. Korea's population is ageing rapidly



Source: Eurostat and the United Nations.

Another factor responsible for the low level of social welfare spending is that Koreans at the present time have a relatively young population. Indeed, the share of the population that is over 65-years-old can be seen in Figure #7.

That share is the lowest in the OECD, after Turkey and Mexico. However, you will see that the population will age very rapidly. The share of the population over 65-years-old is currently 7%. It will double to 14% over the next 20 years. This illustrates Korea's demographic reality: Korea has one of the sharpest demographic transitions in the OECD area. This means that public pension reform is going to be a major challenge. It will not be sustainable in its current form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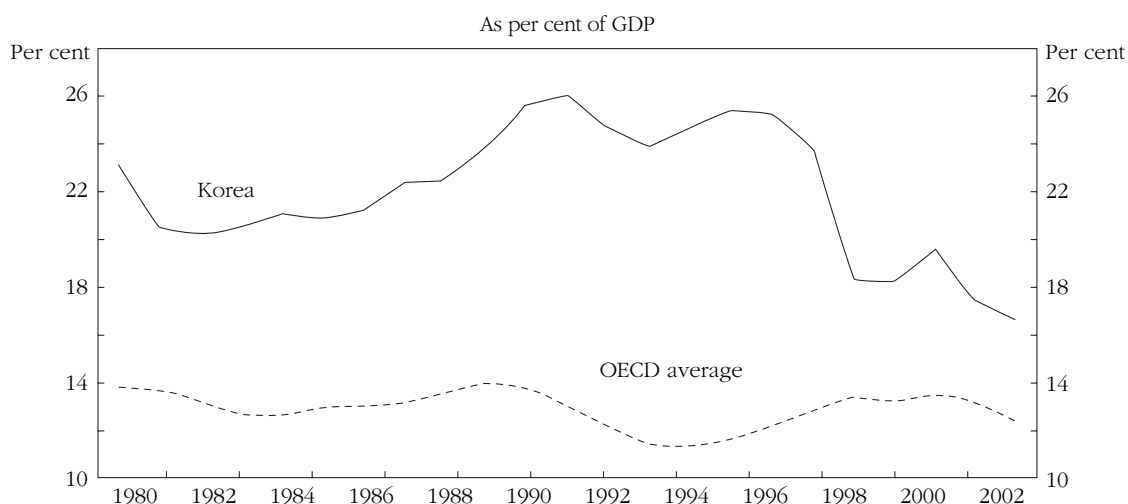
The rapid ageing of the population, combined of course with the potential burden posed by North Korea, suggests that Korea should be cautious in developing its social safety net.

Unemployment insurance is important. It makes a major contribution to labor market flexibility. But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learn from the mistakes of European countries, in particular, which have chronic budget problems and weak work incentives as a result of their social safety nets.

Some of you may be familiar with a process at the OECD where we compare best practices. We learn from each other's best practices. I have always felt that we can learn more from each other's worst practices. There are many effective examples in front of us where we can see that there has been a development of social safety nets which have curbed incentives to work, had a major impact on employment, and a major impact on budgets.

As a former politician, I can tell you that it is a lot easier to give benefits than to take them away. For example, on my way here I had to fly a circuitous route through Prague and Frankfurt because there was an air traffic controller's strike in Paris. There has even been marching in the streets of Paris. There have been general shutdowns. There have been transit strikes. More than 500'000 people converged on Paris last week. This is all because Mr. Raffarin, France's prime minister, wants to increase by two-and-a-half years the required working period for public service workers before they receive full pension benefits, from thirty-seven-and-a-half years to forty years. The private sector already requires 40 years of work before they can receive full pension benefits.

Figure 8. Business investment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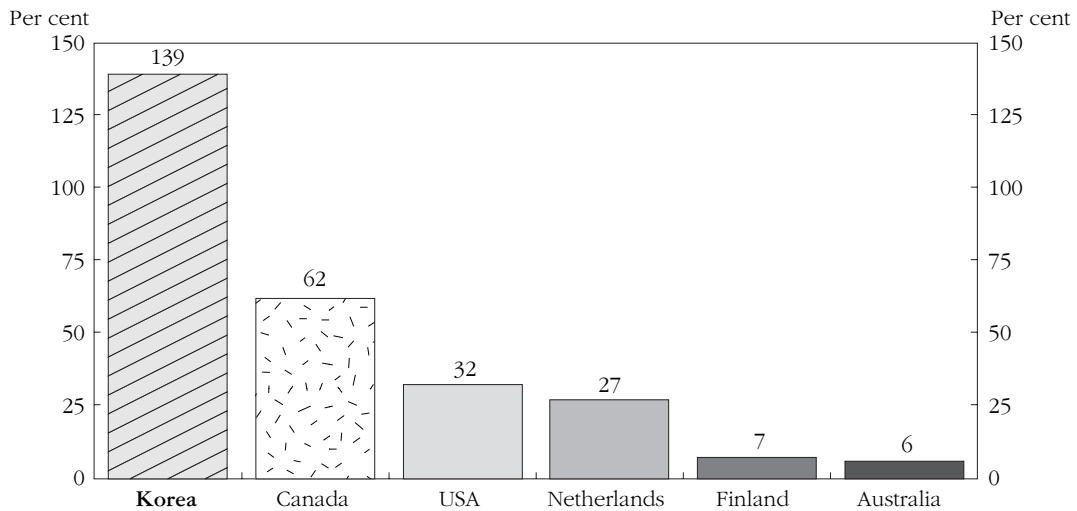
1. Equals total investment minus residential construction and public investment.

Source: OECD

You can see from that example that politicians have to be very cautious. At the same time, though, the social safety net has to be improved for the reasons I mentioned and because of the demogra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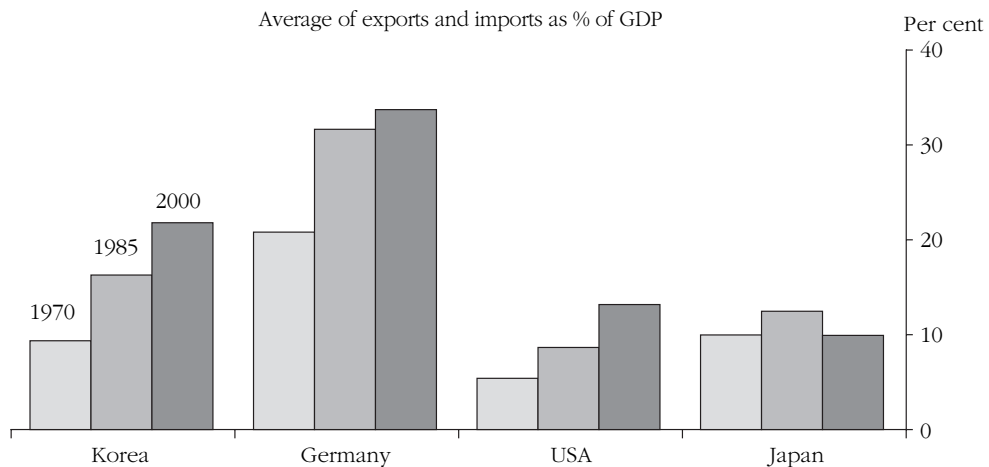
Business and investment as a percentage of GDP is another factor that is important for economic growth. Here, Korea performs extraordinarily well, when compared to the OECD average. Korea has one of the highest business and investment percentages in the OECD. Of course, it has fallen substantially since the mid-1990s. But this is not necessarily unhealthy. Debt financed over-expansion by Korean firms, as you know, is one of the factors that made Korea vulnerable to the

Figure 9. Broadband subscribers per 1000 inhabitants



Source: Broadband subscribers in the OECD, June 2001.

Figure 10. Foreign trade expan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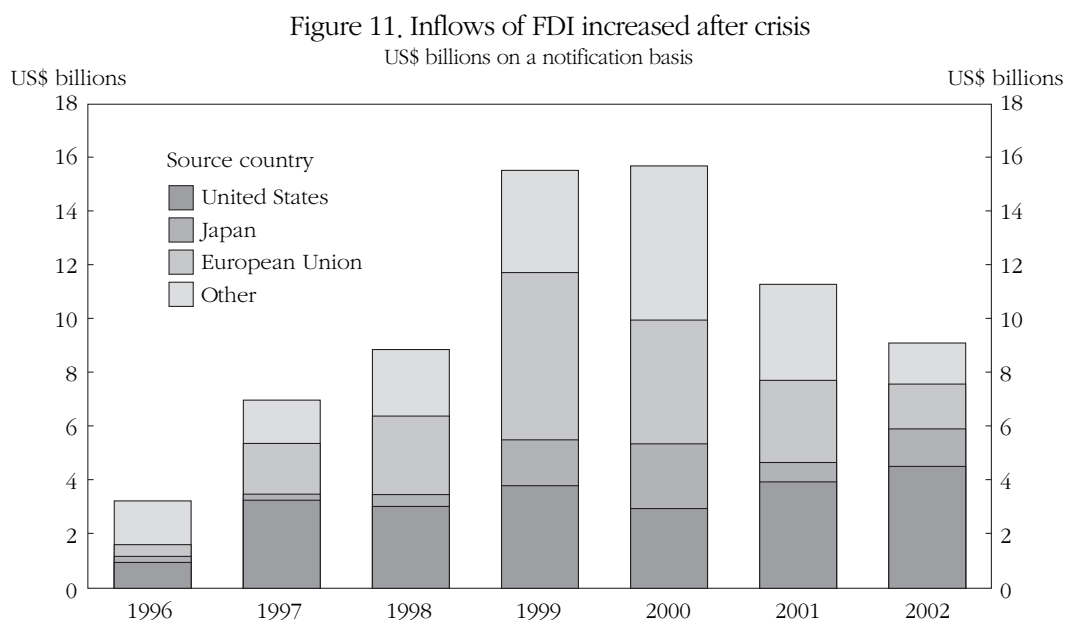
crisis of 1997. The lower level of investment is consistent with stronger balance sheets in the corporate sector.

As can be seen in Figure #9, Korea is one of the leaders in the world in the area of broadband subscribers. You can see in that diagram that Canada doesn't do too badly either, but it isn't even half of the penetration in Korea in terms of broadband. The US falls substantially below that.

Concerning foreign trade expansion—another one of the criteria to which I made reference—you can see in Figure #10 that, again, in terms of openness to trade, Korea has made significant strides. The share of imports to GDP has doubled over the past 30 years. Nevertheless, there are substantial trade barriers remaining, particularly in the agricultural and service sectors. We will hear a lot about this when we approach the next WTO round in Cancun, Mexi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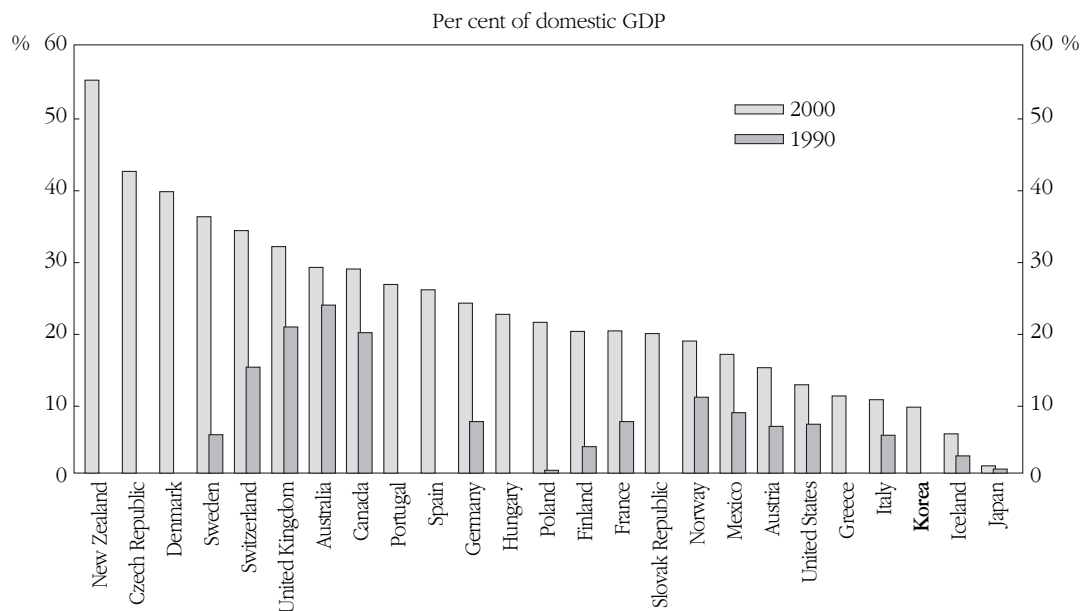
Following the crisis, as most of you are aware, Korea changed its policy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Previously it played a minor role in the Korean economy. The new open attitude to foreign investors boosted inflows of FDI to around US\$ 15 billion in 1999 and 2000, as seen in Figure #11.

Since then,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decline. This has occurred during a sharp contraction of global FDI. This trend is not unique to Korea. Indeed, world FDI fell by half. But in Korea,



Sourc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Figure 12. But stock of FDI in Korea is still relatively low



Source: OECD

following the wave of restructuring, including mergers and acquisitions, FDI got a boost.

However, if we look at total stock of FDI, as seen in Figure #12, it is still very low. It is one of the lowest in the OECD area. It is essential Korea make further progress in removing factors that discourage foreign investment inflows. This will also promote Korea's ambition to become, if you like, a "hub" for Northeast Asia. You can see in Figure #12 where Korea ranks in terms of FDI as a share of GDP. It is third from the bottom.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Korean labor market is one of the major factors that discourages investment in Korea. Flexible labor markets are essential in economies with rapid structural change, such as Korea. As shown in Figure #13, Korea had the second most strict labor market in the OECD in the late 1990s. Employment flexibility is enhanced by more use of non-regular workers. Korea does have a relatively high rate of wage flexibility, as well. But a lot more work has to be done in this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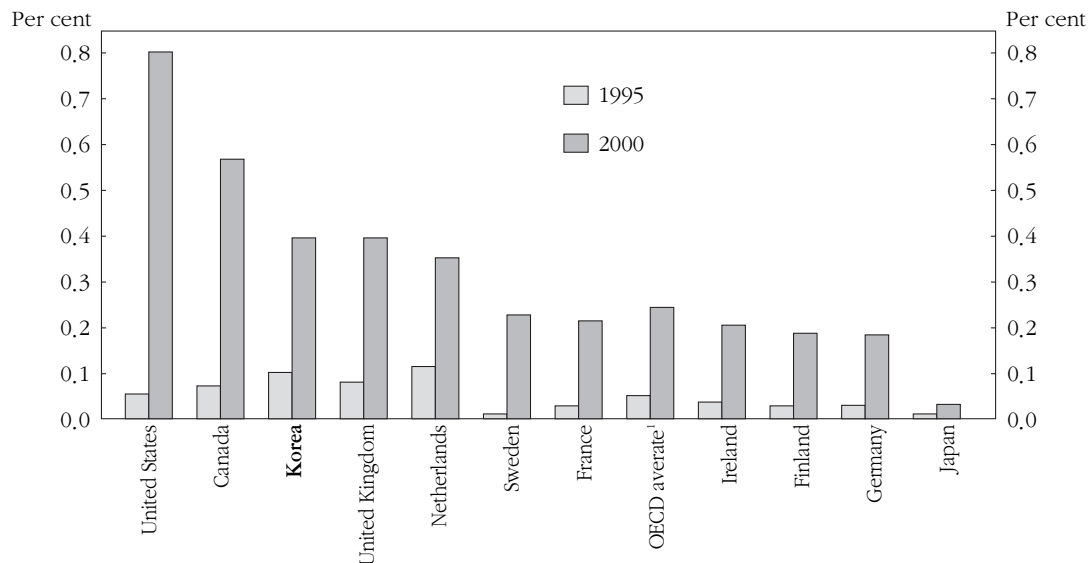
Korea has a very strong entrepreneurial climate. Figure #14 covers the issue of venture capital. Part of the indication of an entrepreneurial climate is the growth of venture capital. You can see in Figure #14 the extent to which, from 1995 to 2000, early stage and expansion financing as a percent of GDP accelerated in Korea. Of course, the US is way out ahead of most of us, but Korea

Figure 13. A flexible labour market in Korea?

- Contentious industrial relations are a key factor discouraging FDI in Korea.
-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 Korea ranked as second highest in the OECD in the late 1990' s.
- Employment flexibility is enhanced by the growing use of non-regular workers.
- Korea has a relatively high degree of wage flexibility.

Figure 14. Venture capital investments

Early stage and expansion financing as % of GDP



1. Average of 19 countries for which data are avail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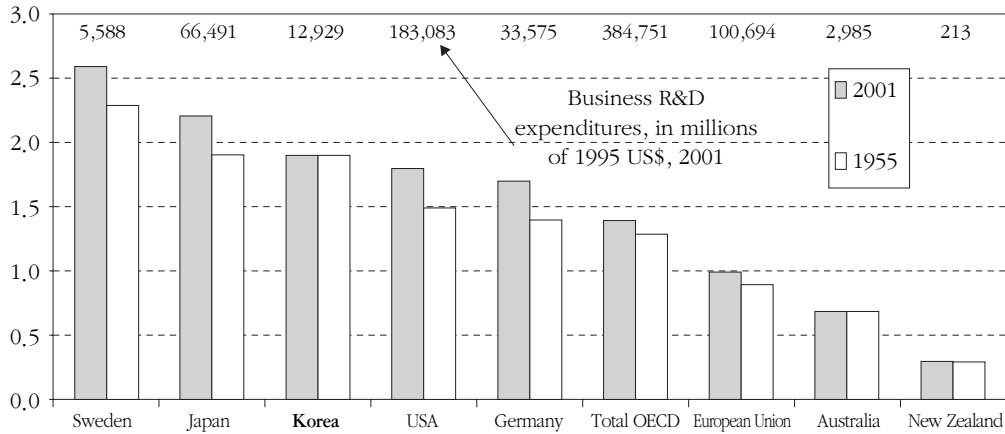
Source: OECD

stacks up in that regard very well.

R&D expenditures are also important to growth. Korea devotes a relatively high share of GDP to research and design, a total of about 2.7% of GDP. The private sector accounts for the bulk of that investment. R&D in other sectors and at universities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Figures #15 and #16). One of the challenges is to integrate the R&D efforts of the government institutes, the universities and the corporate sectors. This would make maximum synergies and maximum practicable application.

Figure #17 is a very encouraging statistic for Korea. This is interesting because I hear a lot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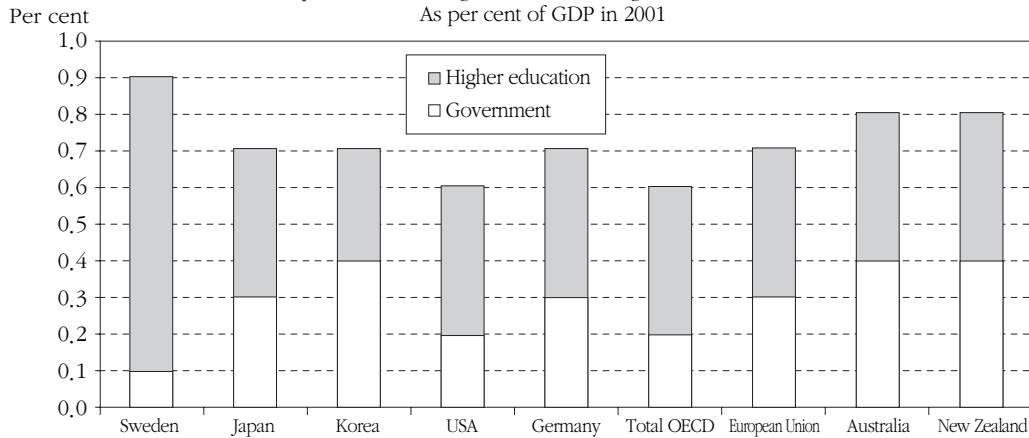
Figure 15. Industry's R&D expenditures
As per cent of GDP



Source: OECD

Figure 16. R&D in other sectors

R&D performed in the government and higher education sectors
As per cent of GDP in 2001



Source: OECD

criticism about the education system here. Yet, when the students were tested under the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test, they did very well. The PISA is a test of 15-year-old students across the OECD. It is a test of a magnitude and of a depth that has never been done before. It tested 265,000 teen-agers not just on how they did on their exams—maths, science, literacy—but how they actually applied their knowledge.

The results were quite surprising. In Figure #17 I included three countries only: Japan, Korea and the US. In reading, Korean students ranked 6th in the OECD. In maths, Koreans were ranked 2nd in the OECD. In sciences, Korean students ranked 1st in the OECD. The performance was absolutely stunning, notwithstanding all the criticisms we hear.

This does not mean that further improvements are not necessary in adopting the education system to the demands of a knowledge-based economy. They clearly are. This crosses over into the area of student financing. I recall that Korean parents, with their great appetite for educating their children, spend almost as much privately as the amount spent publicly on education. So clearly issues have to be addressed.

I think we should be very gratified by the enormous potential of human capital in this country. Reforms to expand the scope of choice in schools and curriculum in this country are very important.

Figure 17. Human capital development
Mean country performance in PISA(OECD Ave=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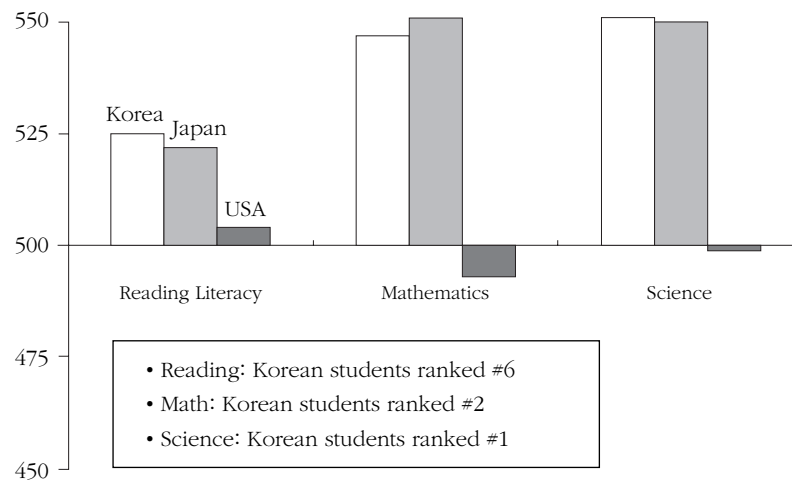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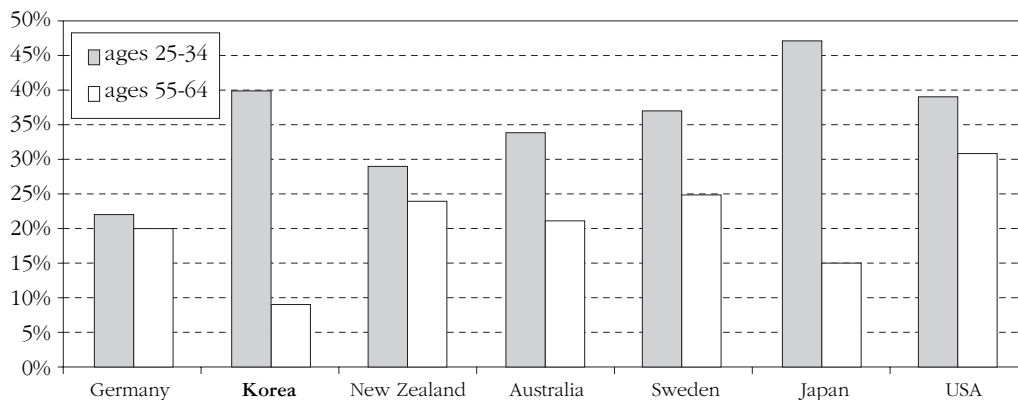


Figure 18. Educational attainment is high
% of population with tertiary-level education, 2001



Source: OECD

If you look at Figure #18, you will see that overall educational attainment is also high. For people aged 25-34, Korea was second in the OECD in terms of percent of 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 only behind Japan. Korea was right up there at the top in terms of number of college graduates.

Before I move into my conclusions, I would like to mention once again the issue of social expenditures. The bottom left triangle in Figure #19 represents economic growth and wealth creation. That is essential to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On the other hand, it has to be balanced by social stability and social cohesion. That is achieved through good governance.

This means that there has to be an effective transfer of benefits of growth to society as a whole. This does not mean cash or transfers. What it means in the most advanced and sophisticated way is the creation of good employment and well-paid jo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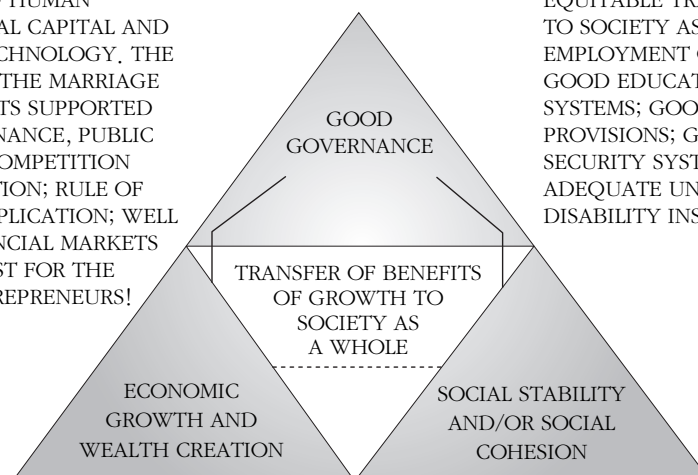
Economic growth, as we all know, is a product of the marriage of human capital, financial capital, and technology. The framework for the marriage is liberal markets supported by good governance, public and private, competition laws, fair taxation, and similar characteristics. In these areas Korea stacks up very well, but with a few problems.

On the social side, social cohesion depends upon the equitable transfer of wealth within society as a whole, good employment opportunities, good education, good health systems, good pension

Figure 19.

ECONOMIC GROWTH AND WEALTH CREATION IS THE PRODUCT OF THE MARRIAGE OF HUMAN CAPITAL, FINANCIAL CAPITAL AND INCREASINGLY TECHNOLOGY. THE FRAMEWORK FOR THE MARRIAGE IS LIBERAL MARKETS SUPPORTED BY GOOD GOVERNANCE, PUBLIC AND PRIVATE; = COMPETITION LAWS; FAIR TAXATION; RULE OF LAW; JUDICIAL APPLICATION; WELL REGULATED FINANCIAL MARKETS ETC. THE CATALYST FOR THE MARRIAGE IS ENTREPRENEURS! ETC.

SOCIAL STABILITY / SOCIAL COHESION DEPENDS UPON AN EQUITABLE TRANSFER OF WEALTH TO SOCIETY AS A WHOLE = GOOD EMPLOYMENT OPPORTUNITIES; GOOD EDUCATION; GOOD HEALTH SYSTEMS; GOOD PENSION PROVISIONS; GOOD SOCIAL SECURITY SYSTEMS INCLUDING ADEQUATE UNEMPLOYMENT AND DISABILITY INSURANCE ETC. -



provisions, and good social security, including adequate unemployment and disability insurance.

So what is Korea's growth scorecard? How does Korea stack up? To answer this question, we can look at the combined analysis of the OECD's economics department and social affairs department (Figure #20). If we look first at macroeconomic policies, we see that the strength is that the government is a net creditor and the budget is in surplus. The weakness is that this country must improve its monetary policy framework, and strengthen the central bank's independence.

As for investment in productive assets, investment is still high, but Korea must still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As we all know, this is not unique to Korea. In terms of openness to trade and investment, the trade barriers have been relaxed and policies to attract FDI have been

Figure 20. Korea's Growth Scorecard

	Strength	Weakness
Sound Macro Policies	Government is a net creditor Budget is in surplus	Need to improve monetary policy framework Need to strengthen central bank's independence
Investment in Productive Assets	Business investment is still high	Need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Openness to Trade and investment	Trade barriers have been relaxed Policies to attract FDI have been implemented	High barriers remain in agriculture FDI has fallen since 2000
Flexible Labour Markets	Wages are relatively flexible Share of non-regular workers is rising	High employment protection for regular workers
Entrepreneurial Climate	Large role for venture capital	Government involvement in venture business needs to be reduced
Innovation: Creation & Adoption	Relatively high level of R&D spending by private sector	Lack of interaction between R&D in government, universities and business
Human Capital	Outstanding scores on international tests	Need for more flexibility in education system

How does Korea Stack Up?

Figure 21. Korea's Growth Scorecard

	Strength	Weakness
Sound Macro Policies	↑	
Investment in Productive Assets	↑	
Openness to Trade and investment		↘
Flexible Labour Markets		↑
Entrepreneurial Climate	↑	
Innovation: Creation & Adoption	↑	
Human Capital	↑	

How does Korea Stack Up?

implemented. But barriers remain high. There are high barriers in agriculture and services. In fact, FDI has fallen since 2000, for a variety of reasons.

In terms of flexible labor markets, Korean wages are relatively flexible. The share of non-regular workers is rising because of high employment protection for regular workers. This situation has to be addressed. In entrepreneurial climate, the large role of venture capital is a strength. But again, government involvement in the venture business needs to be reduced. The creation and adoption of innovation is at a relatively high level, as is R&D spending in the private sector. But a lack of interaction between government, universities and business is holding back innovation. Finally, Korea has outstanding international scores when it comes to human capital, but it needs to have more flexibility in the education system.

So on the whole, if we look at the overall scorecard (Figure #21), sound macroeconomic policies are a strength, investment in productive assets is a strength, entrepreneurial climate is a strength, creation and adoption of innovation is a strength, and human capital is a strength. But Korea's openness to trade and investment is a weakness, though leaning toward a strength, and the inflexible labor markets are also a weakness. Those are the messages that come out of the OECD concerning Korea.

But I must say that there are very few countries in the OECD that could produce a scorecard as positive as this. That, I think, should be very encouraging going forward. Thank you very much.

Questions & Answers

Q The one point I think you have omitted in your presentation is political stability in South Korea. The current government is handling a lot of forces arising from a lot of social interest groups. But these forces give foreigners the wrong impression of the country. How do you evaluate Korea's political/economic status and the government's ability to handle these various voices that might hinder foreigners' arrival in Korea?

A That is best answered by you and by people here. It is very difficult for me to make a judgment on this. Korea now has a new president with a very ambitious program. I followed his progress closely at the inauguration. In fact, I am even coming back here on June 30 for a major economic conference. I am not in a position to judge what the policies

are within the parties or within the political framework itself. That is best left to you.

The reality is that Korea has done very well through some very critical and difficult periods in recent years, as we can see from the evidence. How will that affect foreign direct investment? Well, Korea will be a very attractive country for FDI if these other issues are eliminated. Note that FDI has not yet returned to levels we would have expected for reasons that are totally unrelated to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Labor market flexibility, for example, has huge problems with unions. I know this has been a difficult problem for a long period of time. If Korea were able to develop a strong tri-partite relationship with the unions, I think this would be helpful.

That is what we saw in Ireland. They developed a consensus looking forward, which I would think is something Korea should probably try to achieve. But I have not followed the labor situation here in Korea closely.

Q You briefly mentioned the word “North Korea”. How much do you think the nuclear crisis will affect South Korea's economy in the future?

A I can't really answer that question. Many observers attributed a weakness in the South Korean economy to this so-called “threat”. I gather from my discussions with the government that the situation has improved since I was here for the inauguration. At that time, North Korea had just launched a missile into the sea.

I cannot foretell. But I am very optimistic about the evolution of that situation if these tripartite discussions can be launched. It is a bit beyond the scope of our work at the OECD.

Some years ago, before this most recent nuclear threat was revealed, I made a proposition to then-President Kim Daejung. The OECD could effectively play a role in analyzing the whole North Korean economy. We were to look at all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North Korea, just as we did in China, Russia and Brazil. This would then provide you with a platform upon which you could begin to build economic and social reform. My understanding is that there is not a lot of knowledge about what any comparative advantages might be in North Korea. We want to know what has to be done if they are really interested in developing their economy, as the Chinese certainly are.

The collective expertise of all OECD members, channeled through the OECD departments, is a very effective tool. It is also a very user-friendly process. We work with the governments, with the Russians, with the Chinese and with the Brazilians. We work together and try to come up with an overall assessment of what steps must be taken in what order.

Unfortunately, after then-President Kim and I had that discussion, and I had made available the work we had done on China—which I thought might be encouraging for North Koreans—it was almost that very day that the announcement came that North Korea had this nuclear program. So everything is on ice. And in any event, this proposal would have to be approved by the member countries.

Q Several times you spoke about how you believe the global economy's growth cycle will pick up next year. I'm not clear on exactly why you think that.

A Did you use the term "cycle"? That is basically what all economists are saying. The world has never moved in a linear fashion. We have always had cycles. This one, many in the OECD believe, has started to run its course. The capital investment overhang cycle in certain sectors in the US in particular has been worked out pretty well, except perhaps in some of the telecoms and other sectors. As confidence returns, and consumer demand increases, we will fragily move back to a solid growth pattern.

One thing that would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at would be a successful round in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in Cancun. It would be psychologically very positive. It would go a long way toward help restoring confidence in the potential for mult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expansion on a global basis. There are a lot of issues on the up side, which could contribute significantly toward bringing about a strengthening world economy. That is not to say there aren't down side risks, though. There obviously are.

Q Let me ask you one question about the general trend of globalization and necessary changes in institutions. Generall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incomes increasingly diverge between the rich and poor countries. Do you see a convergence trend among OECD countries in terms of GDP? Secondly, do you see a convergence trend in institutions across the OECD? We often say that in globalization, institutions have to be aligned with global standards. But I know that European countries have maintained many unique institutions,

especially with social security systems and so forth.

In Korea, at first we introduced a system that was similar to that of the US and other countries. But these days we may have to experiment with institutions, such as social welfare. Politicians must be cautious when expanding the social safety net. I would like to hear your views on this.

A Globalization, expressed in terms o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matter and open markets matter. The wealth creation generated by trade and investment is tangible. It is measurable. In fact, we have measured. We have gone back and done economic models that show how wealth was created, in all countries that have participated in globalization.

I could put up some charts that would show you the difference between countries that have been open to trade and investment and those that have been closed. Even on a unilateral basis, those who open have done better.

But how has that wealth been distributed within the member countries? In other words, in the US there has been a lot of debate about globalization. There is a saying: it might be good for Wall Street, but is it good for Main Street? In other words, is the wealth generated from globalization being accrued to a few or is it being broadly spread across society, usually in the form of high-paying jobs.

Part of our job is to show where these benefits have gone, and where they haven't. It is not evident to most people in the US or Europe, but a lot of the benefits are represented in the price and choice of consumer products. Today, there are huge benefits to families all over the world in terms of consumer products which have been pouring in because of free trade. There are so many consumer choices now,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choose what you want to buy.

There are huge benefits. Therefore, in time, there is bound to be a convergence. There will always be rich people and poor people, though. The issue of poverty and how you measure it is an entirely separate issue which we could get into with some of the sociologists present. We don't use absolute terms when measuring poverty. We use relative terms.

In any event, the proof is there: open trade benefits. But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governments are able to adopt the necessary policies to ensure that their own citizens fully participate. Those who lose their job must be re-trained and re-skilled. That is where Japan and Korea have an advantage. In Europe as you know, and in the US and Canada, it is the low skilled who have suffered from globalization. It is the low skilled, who are somewhat older, who have a hard time re-integrating into the work force. They have little understanding of the knowledge-based economies. They have to go down to lower level service jobs. That is why countries must have very good programs for either early retirement, or re-skilling of people who are young enough. We are in a transition period that is creating these very real challenges for domestic policy makers.

On your other question, I do not think every country will end up with the same models or the same institutions. The triangle in Figure #19 has to be kept in balance. Countries have different approaches. For example, the US would never tolerate the individual tax rate that Danes pay. The Danes pay one of the highest tax rates in the world. On the other hand, they have public goods. It is more of a homogeneous society, which helps. Education is paid for. Health is paid for. It is not an individual choice, but that system works. It keeps social cohesion and economic growth in balance. You cannot transfer that model to the US, and you could not transfer the US model to Denmark.

Canada is an interesting example because it is somewhere in between. It is between the European social model and the US. It has universal health care and social security systems, in place for some years. These are richer than the US systems, but not as rich as the European systems. And even there, politicians have to make changes in order to claw back some benefits.

I do not think we will ever see a one shoe fits all. Countries are too different. If they are able to maintain that balance, with wealth, then their systems are working and are effective. You could argue that Korea today sits only at per capita GDP of US\$ 10'000. But you didn't mention the trend line. That is what is significant: Korea's growth. Korea w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In fact, Ernesto Zedillo, a former president of Mexico, used to berate his population. He would point to a chart where Mexico had a higher per capita GDP than Korea. He would ask what happened here. Why have we not been able to do what the Koreans have done, he would ask. Bear in mind that Korea is a very encouraging example to other countries. The record is very solid.

Q Foreign direct investment brings benefits in at least two areas. One is the injection of capital that comes in. The other area is the learning effect, where new companies perhaps bring different and new skills into an economy. Certainly in Britain we are very conscious of the impact that second effect had. Has the OECD done any study on the benefi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what areas is FDI most valuable to an economy?

A Your point is absolutely right. As much as we talk about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re is hardly a country one can think of where the actual capital is going to exceed that of what would be derived from domestic savings. Why do the Chinese want FDI? China has the highest per capita savings rate of any country in the world. Their challenge is to channel that into productive sectors. FDI has two major benefits. It not only brings in technology, but also managerial skills. That is one of the great attractions of FDI. Also, it provides competition for state-owned enterprises. They have to deal with their SOEs. It is not an easy issue. One way to deal with them is to bring in competitive foreign enterprises, which will hopefully have a spillover effect in terms of technology, efficiency, and managerial skills into state-owned sectors. In almost every instance, the accompanying benefits of FDI are far greater than the actual capital.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개인회원

 - 법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연구원 주최 행사에 우선 초청
연구원 주최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 무료 제공
법인 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개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연구원 주최 행사에 초청
행사 참가비 할인
연구원이 발간하는 일부 간행물 무료 제공

 - 후원회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회원 가입 문의
551-3334~7(전화) 551-3339(팩스)
E-mail :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
E-mail :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